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웁니다.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 일 시 | 2015. 5. 8.(금) 15:00~17: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 최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한국언론학회 공동주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한국언론학회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2015. 5. 8.(금) 15:00~17:00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일정표

시 간	내 용
15:00~1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식 <p>진행 심재웅 (숙명여자대학교 교수)</p> <p>환영인사 이정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심재철 (한국언론학회 회장)</p> <p>축사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p>
15:15~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제 · 토론 <p>사회 오미영 (가천대학교 교수)</p> <p>발제 홍성구 (강원대학교 교수)</p> <p>토론 황영철 (국회의원, 새누리당), 홍종학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진후 (국회의원, 정의당), 김의겸 (관훈클럽 감사),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이희숙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김경애 (대학생,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자), 허익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권자(청중) 질문● 발제자, 토론자 답변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2015. 5. 8.(금) 15:00~17:00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차 례

발제문	1
정치참여와 사회통합 - 토론과 선거를 중심으로- 홍성구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문	25
황영철 (국회의원, 새누리당)	
토론문	33
정진후 (국회의원, 정의당)	
토론문	43
김의겸 (관훈클럽 감사)	
토론문	51
김성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토론문	61
이희숙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토론문	75
김경애 (대학생,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자)	
토론문	87
허익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발 제 문>

정치참여와 사회통합
— 토론과 선거를 중심으로 —

홍 성 구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발제문>

정치참여와 사회통합

- 토론과 선거를 중심으로 -

홍 성 구(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 서론: 문제 제기

2014년 EBS에서 방송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시리즈는 토론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그 중 5부에서는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G20 폐막 기자회견장에서 벌어진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었는데, 질문하는 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상황에서 한국기자들은 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질문하면 되지만, 질문이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질문을 잘 하는 것 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등을 고민한다는 것이다. 결국 질문권은 중국기자에게 넘어갔다.

강의 전체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마이클 샌델(M. Sandel)의 하버드대 강의 장면은 경이로울 정도이다. 학생들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신념에 입각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이 두 속담은 토론에 대한 우리의 잠재의식일지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에 대해 불편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덧붙여 유교문화권의 영향, 남북 분단과 이념 대립 등으로 인한 여론분위기도 억압적이다. 이견에 대해서도 별로 관용적이지 않다. 토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문화는 경합하는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¹⁾

토론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기자회견장이나 강의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

1) 한병철은 한국사회가 설득(persuasion)을 교화(indoctrination)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편견이 극복되어야 민주적 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2012).

사회가 활발한 토론문화를 갖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또는 사회통합을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장애가 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한 후, 그 내용에 모두 승복해야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뒤집기 일쑤이다. 김영란 법의 제정 과정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가 절묘하게 결합된 변주곡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입법과정에서는 침묵하던 정치인과 언론사가 언론자유에 대한 위축을 명분으로 김영란 법의 위헌 소지를 제기한 것이다. 김영란 법과 헌법의 충돌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 즉 토론이 필요할 때 충분히 토론하고, 그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그에 대해 승복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토론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 요소이다. 즉, 토론을 통해 우리는 공정 사안의 내용, 해결 방법 등을 배울 뿐만 아니라, 민주적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수립하는 것도 토론의 몫이다.

본 논문에서는 토론이 민주주의의 본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하고, 토론을 통해,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인 공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건으로써 언론의 선거보도와 선거법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사회통합

과연 토론이란 무엇일까? 중학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에 나와 있는 토론 개념은 아래와 같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말하기.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각각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말하기이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 주제, 토론자, 사회자, 토론 규칙, 그리고 청중의 조건이 필요하다. 토론 주제는 긍정이나 부정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 토론자는 찬성과 반대의 분명한 의견을 가진 참가자를 말하며, 사회자는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 규칙은 토론자의 발언 시간이나 순서 등을 공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청중은 단순히 토론을 관람하는 소극적 청중과 직접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하여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적극적 청중이 있다(송진우, 2007).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세워 상대방 혹은 청중을 설득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말한다. 토론은 매우 간단하고 일상적 소통방식의 일부이지만, 토론의 주제·토론의 참가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

의 토론을 상정할 수 있다. 친구들과 찻집에서 우연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토론이 있는 반면, 국회에서 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토론이나 대통령 선거 TV토론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찻집에서 우연히 친구들과 벌인 토론이건, 국회에서 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토론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친구들과 벌이는 토론이 얼굴만 붉히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와 같은 토론이 여론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토론 문화에 대한 고민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토크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미국의 토론 문화도 심상치 않다. 마이클 샌델(M. Sandel)은 TED에서 행한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미국사회는 민주적 논쟁(argument)이라는 잃어버린 기술을 찾아야 한다. 현실에서 토론은 기껏해야 유선방송에서 성난 말싸움이나 의사당에서 이념싸움이다. 신념의 문제를 거론하면 해결되지 않는 갈등만 낳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주적 토론을 개선하는 출발점은 도덕이나 정치적 신념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샌델의 주장은 신념의 문제를 정치적 토론의 주제로 삼지 않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토론 문화가 민주적 토론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샌델의 베스트셀러 제목이 말해주듯이 분배의 문제, 소수자 우대 조치의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토론’은 21세기 민주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민주주의 이론의 숙의적 전환이라고 불릴 만큼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는데, 숙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토론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적 심의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토론은 특정 현안에 대한 여러 집단들의 시각 차이와 이견이 활발하게 분출되도록 하고, 서로의 이견을 줄여 타협과 합의를 모색하는 토의 절차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가 각광 받는 이유는 민주주의에서 도덕적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숙의 민주주의는 현대 다원주의사회의 사회통합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론들은 상당히 많지만 공통적 주장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선호의 집산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라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첫째, 시

민들의 정치참여가 극도로 제한적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의 통치’인데, 투표를 제외하고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둘째, 약자나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약자나 소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셋째,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이 대응하기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적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정치적 대표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투표자체는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민주주의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결정 사안들이나 후보들이 어떤 선택 절차를 거쳐 투표에 회부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시민들 모두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평범한 시민들이 투표로 부칠 사안들에 대해 전혀 발언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도시국가라고 보기 힘들었다. 반면 아테네에서는 그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발언권을 가졌다. 엄밀하게 말해 스파르타의 원칙은 민회에서 투표는 할 수 있으나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의 반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 발언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무지하다는 근거를 들어 스파르타의 그러한 원칙에 박수를 보냈다(Woodruff, 2005, 35쪽).

숙의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보육료 지원과 같이 제한된 자원의 분배에 대한 도덕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둘째는 공적 이슈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관용의 문제에 대한 도덕적 불일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로 병역법 개정 과정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원칙을 견지하는 시민을 포럼에 참여시켜 공적 이익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셋째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상호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넷째는 집단적 행동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논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오해를 줄여 나가게 한다 (Gutmann & Thompson, 2004. 참조).

숙의 민주주의는 가장 최신의 민주주의 이론이지만,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이념을 담고 있다. 최초의 민주주의에서 발견되는 이념은 ①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yranny), ② 조화(harmony), ③ 법에 따른 통치(rule of the law), ④ 본성에 따른 자연적 평등성(natural equality), ⑤ 시민 지혜(citizen wisdom), ⑥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reasoning without knowledge), ⑦ 일반교양 교육(general education) 등 일곱 가지이다. 이 중에서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은 숙의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숙의’와 직접 연결된다(woodruff, 2005, 41-42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통치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적인 결정 사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미리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린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아테네인들은 논쟁을 통해 상반된 의견을 모두 따져보고 논쟁의 결과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동전을 던지는 것이나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나은 방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woodruff, 2005, 293쪽).

현대 민주주의에서 고대 아테네의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추론’을 대체할 수 있는 책임자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여론’이다. 18세기의 발명품인 ‘여론’은 민중의 목소리로 여겨졌다. 그래서 고대 민주주의에서 집회가 맡았던 역할을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여론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여론은 민중이 공적 사안에 대해 자신을 표현하는 장소로 여겨졌다. 여론은 대의를 완성하는 수단이자 그 한계를 보정하는 보안물로서 처음부터 민주적 대의라는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Negri, 2004, 312쪽).

여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즉, 여론은 통일되고 조작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핵심원리로서 여론에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학자가 바로 하버마스다. 하버마스는 민주적인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토론이 선전이나 선동 등 전략적 의사소통을 걸러내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절차에 기틀을 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만드는 여론이 법률 제정의 토대가 될 때, 비로서 숙의 민주주의가 달성되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사회통합이다. 하버마스는 토론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공론장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토론, 둘째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다. 전자는 ‘발견의 맥락’에, 후자는 ‘정당화의 맥락’에 해당한다.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은 유동적인 시간적, 사회적, 객관적 경계를 가지면서, 서로 중첩하는 여러 하위 공론장의 융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약 없는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이나 욕구해석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다(Habermas, 1992/2007, 414쪽).

이렇게 제약 없는 공론장이 어떻게 하면 건전한 여론을 산출시키는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버마스는 현실사회를 ‘전략적 행위(혹은 성공 지향적 행위)’와 ‘상호 이해 지향적 행위’가 양극화된 상태로 파악한다. ‘전략적 행위’는 모든 상황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평가하고,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공동의 상황이해에 의존하여,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 주장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공론장에서 시민들은 화자와 청자, 배우와 관객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데, 공론장의 경계가 시청자나

동시대인처럼 넓어질수록 시민들은 관객의 입장에서 어떤 주장이 상호 이해 지향적 행위로서 타당한지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전략적 행위가 걸러지는 것이다 (Habermas, 1992/2007, 481쪽).

공론장에서의 토론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칙적으로 개방되며, 균등한 발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²⁾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은 자본주의 경제체계가 아닌 생활세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파악한다. 경제체계가 기술적 통제의 규칙에 따른다면 생활세계는 상호작용의 도덕적 규칙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공론장에서 형성된 여론을 바탕으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기본 신념은 생활세계의 언어행위가 새로운 사회 통합의 토대가 되어야만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이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하버마스의 기획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공론장에 정보를 투입하는 매스미디어가 정치권력과 자본의 통제에 급속도로 예속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19세기와 20세기의 여러 대안적 신문들과 여타 미디어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미디어 기업들이 거대 복합기업들로 합병됨에 따라 그들이 배포하는 정보는 점점 더 동질적이 되어 갔다. 예를 들어 미디어 학자들은 2003년 이라크 전쟁 기간 중에 주요 미국 신문들과 TV 네트워크들이 한결같이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Negri, 2004, 315쪽).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도는 언론계 스스로 ‘보도참사’라고 부를 만큼 참담한 것이었다. 공론장에 의제를 투입하는 매스미디어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공론장의 토론도 활성화되기 어렵다. 2015년 4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세월호 보도 결의문은 우리나라의 언론질서가 얼마나 왜곡되어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2)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 담화상황이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잠재적인 담론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적 언어행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참여자들은 언제나 담론(대화)을 시작하고, 주장과 반박을 통해 물음과 답변을 지속할 수 있다. ② 모든 담론 참여자들은 해석, 주장, 권고, 해명 그리고 정당화를 개진하고, 이것들의 타당성 요구를 문제 삼아 근거를 제시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 결과 어떤 선입견도 주제화와 비판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날 수 없다. ③ 행위자로서 표현적 언어행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즉 자신의 입장, 감정, 소원을 표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진 화자만이 담론에의 참여가 허락된다. ④ 행위자로서 규제적 언어행위를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다시 말해 명령하고, 반항하고, 허락하고, 금지하고, 약속하고, 약속하도록 만들고, 변명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진 언어행위자만이 담론에의 참여가 허락된다(Reese-Schäfer, 1991/1998, 32~33쪽).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그동안의 부끄러운 보도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세월호 관련 보도로 상처 입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표하며 앞으로 정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특정 정파에 치우쳐 세월호 관련 보도를 축소 또는 왜곡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선다.

3. 토론을 위한 공공철학

토론에 참가한 행위자는 어떤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할까? 토론에 참가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편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동기가 아니라 확고한 공공 철학에 기반을 둔 것임을 펼칠 필요가 있다. 진보 정당, 보수 정당, 특정 공공철학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단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 통합 혹은 정의나 공정성의 문제를 둘러싸고,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공철학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성은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중심적인 가치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공정한 분배가 전제되어있지 않으면 자발적인 사회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정성 논란은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공정성에 관한 담론은 어느 날 불현듯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2010년 출간된 마이클 샌델(M.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200만부나 팔리는 진기록을 수립했으며, 2011년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을 사퇴했다.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도 다름 아닌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러나 현재 공정성 담론이 낳은 결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정성의 담론에 힘입어 추진한 복지 정책은 사회를 통합시키기 보다는 분열시키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소위 ‘노인복지’와 ‘무상급식’ 간의 충돌은 여당과 야당 및 보수와 진보의 차원을 넘어 노인과 청년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교통 약자 배려를 위해 도입된 노약자석이 세대 간 갈등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단도 이와 같은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 지하철 1~4호선 교통약자 관련 민원이 2012년 22건에서 2014년 40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세계일보, 2015. 4. 21).

공정성 담론이 한 차원 높은 사회적 협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부추긴 것은 정치권의 득표 전략으로 왜곡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2010년부터 촉발된

공정성의 담론은 ‘노인복지 대 무상급식’ 논란을 통해 세대 간의 대립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성 담론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이 주도하고, 세대 간의 분배 문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나 다문화 사회의 문제 등은 공정성 담론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5년 4월 초 유승민·문재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큰 주목을 받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하며 양극화 해소를 당면과제로 제시했고, 문재인 대표도 생활임금제를 언급하며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공정성의 담론이 양극화 해소로 향하고, 새로운 사회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현대 정치철학에서 공정성에 대한 이론은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시각이다. 둘째는 샌델을 중심으로 한 시민적 공화주의의 시각이다. 셋째는 패킷을 중심으로 한 고전적 공화주의의 시각이다.

자유주의의 사상사적 흐름 속에서 롤즈(1921~2002)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평등에 가까운 의미의 ‘공정’이라는 요소와 ‘자유’를 양립시키는 정의론을 구상하여, 자유주의가 전력을 다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롤즈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며, 둘째는 서로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의의 원칙에 대해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롤즈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a. 각자는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에 입각한 완전한 걱정구조에 대한 동등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구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구조와 양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평등한 정치적 자유, 그리고 다만 그러한 자유들이 그 공정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 b.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이들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평등의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하며, 둘째, 이들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awls, 1993, 6쪽).

롤즈는 자신의 이론체계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자발적 협동체계에 참여한 시민들은 사회의 기본구조를 결정할 정의의 원칙을 계약을 통해 찾아야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내용을 채울 정의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인

정되는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에 좀 더 적절한 정치적·사회적 기본제도의 특정한 사회적 합의·조정 방식의 의미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계약을 통해 결정해야 할 원칙은 ‘특정한 여건 속에서의 개인들과 그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정의의 원칙’이 아니라 ‘제도 속에서의 정의의 원칙 혹은 정의로운 규율체계’이다(박순성, 1996, 154~155쪽).

그렇다면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어떻게 합의할 수 있을까? 무지의 장막이란 롤즈가 새로운 사회계약에 있어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데 있어 평등을 저해하는 우연성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인지상의 조건이다. 롤즈는 계약당사자인 모든 사람들은 무지의 장막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무지의 장막 상태에서 계약당사자는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함에 있어 자기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있어서의 지위나 계층은 물론 재능이나 체력적 배경, 선관, 심리적 경향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 무지의 장막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일 경우를 가정하고, 이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된다.

무지의 장막 상태에서 공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심의 한다면, 그 결과가 공정할 것이라는 것이 롤즈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롤즈는 무지의 장막을 일반 시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무지의 장막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롤즈의 정의 이론은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적합한 이론체계이다. 하지만 맹점은 존재한다. 롤즈의 정의이론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는 적합하지만, 다문화 가정 등 소수자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개인주의와 국가중립성³⁾을 핵심 가정으로 하기 때문이다.

샌델은 롤즈가 신봉하는 자유주의의 국가중립성으로는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샌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Sandel, 2009/2010, 262쪽).

1.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정의하려면 문제가 되는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를 이해해야 한다.
2. 정의는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논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안겨

3) 국가 중립성 명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기본 구조의 정책에 있어 둘째, 합당하지만 논쟁적인(controversial) 셋째, 선의 이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선의 이념'들이란 어떤 활동이 삶을 좋게 만드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판단들이 다양한 정도로 체계화된 가치관을 말한다. 이 이념들 가운데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아서)합당한 기준을 만족하는 것들도 합리적 개인들이 이견을 보일 때는 '논쟁적'이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기본적 권리와 혜택, 의무를 분배하고 조정하는 기본 활동에서 일부 논쟁적 선의 이념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 중립성 명제이다(주동률, 2002, 173쪽).

출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논의하는 것이다(Sandel, 2009/2010, 262쪽).

이 때 정의는 절대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소득·부·기회의 분배를 말하기 전에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시민적 공화주의의 대답은 정치의 목적이 좋은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참여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로 생각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andel, 2009/2010, 274쪽).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려면, 어떤 미덕에 영광과 포상을 주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여성을 불공정하게 처우하는 조치이지만, 공동체가 장려해야 할 미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당한 보상일 수 있다.

시민적 공화주의에 있어 정치참여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유는 시민적 덕성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화주의적 자유는 어떤 일정한 형태의 공공생활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다시 시민적 덕성의 배양에 의존한다.⁴⁾ 샌델은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가 형성적 정치(formative politics)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형성적 정치는 국가가 시민들에게 정치 참여에 필요한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적 숙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과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공적인 일에 대한 지식, 소속감, 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 도덕적 유대감 등이 필요하다(Sandel, 1996/2012, 18쪽). 최선의 정치적 숙의는 서로 경쟁하는 정책들에 대한 숙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특성과 목적을 둘러싼 경쟁적 해석에 관한 숙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는 중립성을 견지할 수 없다(Sandel, 1996/2012, 463쪽).

샌델이 고대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을 현대사회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권력에 대한 대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공동선을 장려해야 한다는 샌델의 지적은 심각한 우려는 낳는다. 첫째,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조건으로 할 때, 국가가 특정한 공동선을 견지하면 술한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치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지만, 샌델은 이와 같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둘째, 공동체 내부의 억압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다. 샌델의 견해를 따르면 주변화된 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지배적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공동체

4) 이와 같은 시각은 아렌트(H. Arendt)와 유사하다. 국민국가, 복지국가, 전체주의 등과 같은 근대적 정치형태들은 이와 같은 정체성을 성취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하는데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며, 오로지 참여 민주주의만이 정치와 정체성의 내적인 연관성을 회복하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McGowan, 1998).

내부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영속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Kymlicka, 2002/2005, 362-363).

겨울철에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배심원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국경일 날 국기계양을 의무화하는 등은 사회적으로 꽤 큰 논란을 야기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는 흔히 민주대 비민주의 대립구조를 갖는데, 이와 같은 대립구도는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야기해주지 못한다. 자유주의 대 시민적 공화주의나 혹은 소극적 자유 대 적극적 자유주의의 논쟁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롤즈와 샌델이 각각 양 극단에 위치한다면, 페티트를 위시한 고전적 공화주의는 양자의 조화를 꾀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전적 공화주의의 독특한 측면은 정치를 도구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적 공화주의가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전적 공화주의는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정치에 참여한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정치참여를 동기화할 수 있는 요소로서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이 때 시민적 덕성은 획일적인 공적 가치의 내재화나 개인적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비지배를 실천하는 것과 연관된다. 즉, 고전적 공화주의의 시민적 덕성은 시민사회 내적으로는 상호 존중을, 시민사회 외적으로는 자의적 권력에 대한 경계(vigilance)를 강조한다(Pettit, 1997, pp. 280-281).

고전적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심의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페티트는 공정한 심의의 조건이 롤즈가 제시한 무지의 장막처럼 표준화된 절차이거나 샌델처럼 특정한 가치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파악한다. 페티트는 이와 같은 원칙을 숙의적 공화국, 포용적 공화국, 반응적 공화국 등의 형태로 제시한다.

페티트는 숙의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비지배가 적합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간섭해야 하는 권력이자 제도이지만, 동시에 이 같은 권력의 행사는 조세징수, 법률제정 등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공화주의의 비지배는 어떻게 하면 시민적 삶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비자의적으로 행사되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개입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인정하는 공통된 이익을 따를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공화주의의 비지배 개념은 숙의민주주의의 목표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비지배는 국가기구의 범위를 넘어서 노동현장, 지역공동체, 가족의 영역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Pettit, 1997).⁵⁾

5) 비지배는 스키너의 역사적 분석으로부터 추출된 개념이다. 스키너는 1640년부터 1660년까지 영국내란 당시 공화주의를 분석하여 자의적 권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하는 비지배 개념을 수립했다. 스키너는 비지배가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라는 소극적 자유나 '정치적

공화주의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자유주의와의 공존의 틀을 제공하고,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자의적 지배에 대한 저항을 체화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민주적 숙의를 부각시킨다(곽준혁·페티, 2009, 105-106쪽).

숙의적 공화국은 인민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기 위해 공적 의사결정이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와 관련 있다. 페티는 공적 의사결정의 형태를 흥정 중심적(bargain-based) 의사결정과 토론 중심적(debate-based) 의사결정으로 나누고, 토론 중심적 의사결정이 숙의적 공화국에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흥정 중심적 의사결정을 통한 견제는 다른 당사자들을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협상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유효하다. 반면, 토론적 견제력은 공적 의사결정의 노선에 반대하는 나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Pettit, 1997/2012, 347-348쪽). 토론적 견제력을 허용한다는 것은 입법·행정·사법 등 의사결정의 장소에서 시민들이 결정과 관련 있는 고려사항들을 확인하고,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공적 숙의 과정은 중립적이어야 한다(Pettit, 1997/2012, 349쪽).

포용적 공화국은 공적 의사결정이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필요하다. 포용적 공화국의 핵심은 입법부나 배심원 등의 구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한 종교, 한 성, 한 계급, 한 인종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Pettit, 1997/2012, 354-356쪽). 반응적 공화국은 시민들이 제기하는 견제가 적절하게 청취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즉, 상이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평에 대한 적절한 청취가 이루어져야 하며,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도를 지닌 의사결정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Pettit, 1997/2012, 361쪽).

공화주의가 비지배에 집중하자는 주장은 공동선에 대한 합의가 현대 다원주의의 양상들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현대 다원주의의 핵심적 딜레마는 가치의 양립 불가능성과 비교 불가능성으로 요약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우선적인 원칙은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견제력(contestabi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누구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진보와 보수 간의 토론만이 아니라 공공철학들 간의 토론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공동체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적극적 자유와도 다른 '제3의 자유개념'이라고 주장한다(Skinner, 1998/2007).

4. 토론 활성화를 위한 여건 : 공정성을 넘어

1) 후보자 TV토론 방송

불과 얼마 전까지 후보자 TV토론회는 선거운동의 백미로 꼽혔다. 그것은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TV 매체의 특성에 후보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토론회 형식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초의 TV토론회였던 1960년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후보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곁들여지면 더욱 완벽하겠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TV토론회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직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채택하는 방식은 TV토론회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TV토론회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유권자의 정치지식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민주주의 발전에는 식견있는 유권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 제공 매체로서 TV토론회의 등장과 활성화는 유권자의 정보환경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까지 TV토론회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종합해보면, TV토론회는 유권자의 태도를 바꾸기 보다는 기존의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다 우세하다(한정택·이재목·조진만, 2013).

TV토론회의 효과나 유용성에 앞서 고려할 것은 정치의 본질과 관련성이다. 현대사회 사회에서 ‘정치’만큼 모호한 개념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정치적 행위의 원형이 토론에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한나 아렌트(H. Arendt)는 고대 도시국가에서 정치의 본질을 ‘토론’을 통해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규정한다.

도시국가를 확립함으로써만 인간들이 전 생애를 정치적 영역 속에서, 즉 행위와 토론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Arendt, 1958, 77쪽).

그리스인들은 아레테(arete)로 로마인들은 비르투스(virtus)로 불렀던 탁월성은 언제나 공론장에서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공론장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능가하거나 타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할 수 있다. 공론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은 사생활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탁월성을 획득할 수 있다. 탁월성의 획득을 위해서는 정의 상 타인의 현전이 언제나 요구된다(Arendt, 1958, 101쪽).

그리고 나아가 권력과 폭력의 개념을 분리시키고 의사소통적 권력의 개념을 제시한다.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권력과 폭력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권력과 폭력은 대립적이다. 즉 하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서, 다른 하나는 부재한다.

폭력은 권력이 위태로운 곳에서 나타나지만, 제멋대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권력의 소멸로 끝난다. 이것은 폭력의 대립물을 비폭력으로 사고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래서 비폭력적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어반복이다. 폭력은 권력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은 권력을 전혀 생산할 수 없다(Arendt, 1970, 90쪽).
(참고문헌 누락)

아렌트가 말하는 권력은 ‘그냥 행동하지 않고 제휴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조응한다. 그것은 집단에 속하는 것이며 집단이 함께 보유하는 한에서만 존속한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있다고 말할 경우, 실제적으로는 그가 일정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그들의 이름으로 행동하도록 권력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권력과 폭력이 빈번하게 결합하지만 권력이 통치에 있어 보다 본질적임을 주장한다. 그것은 정부의 절대적인 폭력수단의 독점도 명령의 준수 없이는 효용이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또한 그 복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론을 공유하는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즉, 아렌트의 말을 빌리면 권력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으로서 여론이 작용하는 것이다(Arendt, 1970, p.80). 이러한 아렌트 식 표현에 의거한다면 권력은 그 자체로서 의사소통적일 수밖에 없으며, 공론영역으로부터 그 작용 및 성장이나 쇠퇴가 결정된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 폭력이나 강제가 개입하면 그것은 완전한 권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Arendt, 1970, p.84).

정리하면, 아렌트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는 공론장에서 벌이는 토론이며 토론을 통해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토론을 통해 타인과 제휴할 수 있는 것이며, 다수의 여론을 토대로 할 때만이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너무나 급속도로 토론과 멀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거나 갈등을 정치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능력도 약화되고 있다. 한국정치가 토론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유를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이다.

신문과 방송 등 전통적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약화와, 인터넷과 SNS의 대중화는 단순히 선거운동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1월 19일, 당시로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창간 기념 인터뷰를 했다는 점은 당시로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오마이뉴스, 2001. 1. 19).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는 인터넷에서 결성된 ‘노사모’가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탄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촛불집회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모두 ‘트통령(트위터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이외수 작가를 찾아 화천까지 방문한 사실은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잘 보여준다.

<그림-1>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이외수 작가



출처: 오마이뉴스, 2013. 11. 23.

정치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그 흐름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가 경계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변화가 정치인이 자신과 입장이 다르거나 혹은 적대적인 사람과 조우하고 토론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산시 상록구의 한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 과정에서 갑자기 퇴장한 사태는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⁶⁾

1997년 15대 대선 때 본격적으로 TV토론이 시작되면서, 그해 TV토론만 54회가 열렸고, 언론사, 단체 초청까지 포함하면 100여회가 넘게 개최되었다. 2002년에도 TV토론이 27회나 열렸는데, 공식적인 TV토론 이외에 각종 토론회가 더 개최되었다(송종길, 2002). 하지만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TV토론이 갑자기 11회로 줄어들었다. 2012년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가 주관하는 TV토론 3회(초

6)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후보자의 갑작스런 퇴장으로 방송 녹화가 40여 분간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상록갑 000 새누리당 후보(32)와 000 민주통합당 후보(50)를 대상으로 방송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들어간 두 후보는 각각 2분간 기초연설을 마친 뒤 사회자로부터 반월공단 활성화방안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000 후보는 주어진 2분을 채우지 못하고 제작진을 향해 'X자' 신호를 보낸 뒤 퇴장했다. 자리를 떠난 0후보는 약 40분쯤 뒤에 자리에 돌아왔다. 이후 토론에서 공약발표와 상호질의가 진행됐지만 0후보는 000 후보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0 후보의 퇴장과 답변 거부로 예정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일찍 종료됐다(머니투데이, 2012. 4. 2).

청)를 제외하고 각종 단체,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TV토론은 개최되지 못하였다(박상호, 2013).

18대 대선 TV토론에 관한 다양한 보도가 있었으며, TV토론의 형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하면, 1차 대선후보자 TV토론의 경우 재반박과 재질문 기회가 차단되면서 ‘토론 없는 토론’으로 치러졌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시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후보자간 열띤 토론이 못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김세욱, 2012). 형식적 제한은 토론 내용의 빈곤을 낳는다. 일방적 홍보를 해도, 실천이 불가능한 주장을 해도 검증할 길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토론이 형식위주로 흐른 것은 선거관리에 있어 공정성을 우위에 두는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후보자들 간의 경합이 낳는 동태성이 사라지면, TV토론회의 지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 경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선거에 투영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TV토론이 필요하다. 지지도 열세인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열망을 표출하고 드라마틱한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때 TV토론은 과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2) 선거보도: 공정성과 정치참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핵심은 아마도 공정한 선거관리와 유권자 참여 활성화일 것이다. 선거보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불공정성이 아니라 선거보도의 위축에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선거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그 후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양자경쟁구도로 치러졌으며, 지지율 격차 또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보도의 불공정성이 과거 대통령 선거에 비해 크지 않았다. 진보·보수 신문의 대통령 선거 보도사진을 분석해본 결과 사진 크기, 표정, 지면 등에서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의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이상학, 홍성구, 2013).

그러나 진보 신문이나 보수 신문 모두 사진의 게재 방식에 있어 공통적으로 놀라울 만큼 두 후보의 유사한 사진을 게재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기계적 공정성에 입각해서 사진을 선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후보의 특성, 선거 운동 전략이 나타나는 보도 사진은 많지 않았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됐다.

<사진-1> 박근혜·문재인 빗속 유세장면: 조선일보



최종권 기자 조선일보 기자
 마지막 주말-혼신의 빗속 유세 박근혜(왼쪽 사진)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겨울비가 내린 14일 각각 부산에서 유세를 벌였다. (20.5-15.9)cm

조선일보, 2012. 12. 15 (3면)

<사진-2> 대통령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 경향신문

경향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전남 천안시 서북구 병충동 이마트 앞에서 유세에 앞서 손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천안 | 박민규 기자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7일 동인천역 남향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인천 | 경운중 기자

2012년 12월 18일 05면 (정치)

경향신문, 2012. 12. 18 (5면)

대통령 선거 방송 보도도 이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최영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10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KBS·MBC·SBS·YTN 등 4사의 대선 보도는 601건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3건, 리포트 길이로 4분 30여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내용도 부실했는데, 90.5%가 중계보도에 지나지 않았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방송 보도가 절대적으로 보도량이 부족하고 보도 내용도 중계 방송에 머무르면서 '전광판 뉴스'라는 혹평이 나왔다. 2012년 10월 17일부터 12월 12일 까지 주요 방송사의 대선보도를 모니터한 최영재 교수팀은 '지금까지의 2012년 대선 방송뉴스는 도식과 편파에 빠져 언론의 민주적 규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교수팀은 이어 "2012년 대선에서 방송보도는 뉴스 흥내만 내고 있는 전광판 뉴스 신세가 되어 유권자들은 힐끗 쳐다 보다가 인터넷 댓글이나 소셜미디어 등으로 향하게 만들었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편파 방송 논란에 대해 "정파적 분열에 의해 표심을 결정한 분열된 유권자들의 태도를 강화함으로써 유권자의 분열을 공

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방송뉴스가 이토록 참담한 평가를 받은 첫째 이유는 절대적으로 방송 뉴스가 부족한 탓이 크다. 해당 기간 KBS·MBC·SBS YTN 4사의 대선 보도는 601건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3건, 리포트 길이로 4분 30여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방송 내용이 충실하지도 않았다. 보도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사실 전달 보도는 66.4%, 갈등 공방을 중계한 보도는 24.1%로 나타나 약 90.5%가 중계보도에 그쳤다.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보도도 극도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에 등장한 취재원 1,235건 중 시민단체와 시민 취재원은 14건(1.1%)이었고 반면 대선 주요 후보 및 캠프 인사의 취재원은 1092건(88.4%)에 달했다(미디어 오늘, 2012. 12. 17).

공정한 언론보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FCC가 방송의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폐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축 때문이었다. 즉, 공정성 원칙이 냉각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와, 방송이 논란이 되는 사안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역행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선거보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선거보도에서 공정성에 치우친 나머지, 후보자를 검증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을 규명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볼 일이다. 선거에 대한 언론보도의 위축은 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감소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5. 결론 : 선거법 개정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와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번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있으며, 국회의원 정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인데,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인구가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 간 편차가 너무 커서 1표의 가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고안된 것이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첫째, 현재의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뉴스프레임이 나타난다. 특히 선관위에서 표방한 대로 지역별 대립구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호의적 시각이 많다(고선규, 2015. 3. 18; 강남훈, 2014. 4. 26).⁷⁾

7) 그러나 반대의견도 제시된다. 지역적 대립구도는 약화시킬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

<표-1> 선관위 선거법 개선안

구분	현행	개정 의견
선거제도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246명) 및 전국단위 비례대표(54명) 1인 2표제로 선출	국회의원 정수300명...지역구(200명 안팎), 6 개권역별 비례대표(100명 안팎) 1인 2표제로 선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불가, 석패율제 미실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당내경선, 여론조사 경선, 전략 공천 등	국민경선 실시
	후보 사퇴 선거일 직전까지 가능	후보 사퇴 선거일전 11일부터 금지
	후보사퇴 시 선거보조금 반환 불필요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
정당	당원협의회 허용, 당비모금·당원관리불가	시·군·구당 허용, 당비 모금 및 당원관리가능
정치자금	법인·단체 정치자금 지부 금지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허용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선거있는 해는 3억원)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 2억원으로 현실화(선거있는 해는 4억원)

출처: 국제신문, 2015. 2. 24

둘째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국제신문, 2015. 4. 7).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의 반대정서 극복과 국회 내부의 의견통일을 전제로 제시했다(서울경제, 2015. 4. 27).

아직 여론의 방향이 자리 잡지 않았지만, 서서히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 뉴스 프레임이 생겨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오마이뉴스, 2014. 4. 15), 일부 언론들도 부정적 뉴스 프레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미디어 오늘, 2015. 4. 15).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은 여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강원택 교수가 민주국가 24개국의 의원 1인당

자 입장을 대변하는데 취약할 수 있으며, 중앙당의 권한을 강화하고, 군소정당 난립과 여소야대를 초래할 수 있어 정국 불안정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아울러 지방에 선거구가 줄어들어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윤영석, 2015. 3. 18).

평균인구를 계산하여 적용한 분석결과에서는 2000년 인구기준으로 572명의 의원정수가 제시되기도 했다(미디어 오늘, 2015. 4. 15). 정치권 스스로 일하는 국회, 봉사하는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그 난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참여이다.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필자의 딸이 친구들과 함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나갔다가 특정 정당 선거운동원들과 시비가 생겨서 그냥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다. 아이들이 입은 옷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것 때문이었다. 웃고 넘길 일 만은 아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과도한 규제 혹은 언론자유 억제 문제이다.

영화 <보이후드>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한창 미국 대선이 벌어지던 시기, 민주당 지지자인 아버지(이선 호크)는 차 트렁크에 버락 오바마 대선 후보를 홍보하는 깃발을 잔뜩 넣어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집집마다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오바마 지지자인지 물어보게 한 뒤 집 앞에 그 깃발을 꽂는 일을 시킨다.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이 벌인 모든 행위가 불법이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의해 선거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자신의 집 앞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홍보하는 깃발을 꽂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 “나는 000를 지지하는데 그를 뽑아달라”고 얘기도 못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미성년자(19살 미만)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아이의 부모가 직접 선거에 뛰어들든 후보자라고 해도 자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는 얘기가(한겨레 21, 2015. 4. 1)

내친김에 선거연령대를 낮추는 것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한 언론에서 세니오르 오블리주(senior oblige)라는 신조어를 소개한 적이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만 19세 이상이었으나, 이제 일본도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유럽은 16세로 낮추는 추세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돼가는 우리나라의 20대 유권자는 1980년대 35%에서 지금은 그 절반 이하로 줄었다(매일경제, 2015. 4. 5).

선거에서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나아가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세니오르 오블리주! 미래를 젊어질 청년들을 위해서 유권자의 자리를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투영되도록 하는 것이 미래 한국을 위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참고문헌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s. 이진우·태정호(역) (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
- Arendt, H. (1970). On Violence. 김정한 (역) (1999). 『폭력의 세기』. 이후.
- Gutmann, A., & D. Thompson. (2004).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Habermas, J. (1992).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한상진·박영도 (역) (2007).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서울: 나남.
- Kymlicka, W.(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장동진 외 역(2005).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서울: 동명사
- Negri, A (2004). Multitude. 조정환·정남현·서창현 (역) (2008). 『다중』. 세종서적
- Pettit, P. (1997). Republicanism: A Theory of Freedom and Government. New York: Oxford Univ. Press.
- Pettit, P. 곽준혁(2009). 공화주의와 한국 사회: 필립 페티트 교수와의 대담. 『아세아 연구』. 52(1). 103-141.
-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장동진 (역) (1998). 『정치적 자유주의』. 서울: 동명사.
- Sandel, M.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 (2010).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 Skinner, Q. (1998). Liberty before liberalism. 조승래 역 (2007). 『퀸틴 스키너의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 서울: 코기타툼.
- Woodruff, P. (2005). First Democracy:The Challenge of an Ancient Idea. 이윤철 (역) (2012). 『최초의 민주주의: 오래된 이상과 도전』. 파주: 돌베개
- 박상호(2013). 제18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평가 심포지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한국언론학회.
- 박순성(1996). 정치적 자유주의와 사회정의: 롤즈와 근대 시민사회. 《자유주의 비판》폴빛, 133-177.
- 송진우(2007).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어 용어사전』. 서울: 신원문화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1813&cid=47319&categoryId=47319>
- 이상학·홍성구 (2013). 대통령 선거의 경쟁구도와 보도사진: 18대 대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2(2). 79-120.
- 주동률(2002). 자유주의와 완전주의 . 『철학』, 73호, 171-196.
- 한정택·이재욱·조진만 (2013).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 분석: 제도, 현실, 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2(2). 37-72
- 국제신문, 2015. 2. 24
- 미디어 오늘, 2012. 12. 17
- 세계일보, 2015. 4. 21
- 오마이뉴스, 2001. 1. 19

오마이뉴스, 2013. 11. 23.

강남훈(2015. 4. 26). 선거제도 개혁 없인 복지국가 없다. 한국일보.

고선규(2015. 3. 18).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중앙일보.

윤영석(2015. 3. 18).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중앙일보.

<토 론 문>

국민과 화합·소통하는 혁신 보수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중심으로 —

황 영 철

(국회의원, 새누리당)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국민과 화합·소통하는 혁신 보수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중심으로 —

황 영 철(국회의원, 새누리당)

I. 서론

오늘날 우리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시시각각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쏟아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가 복잡다원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할 때 소모적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치권에 당부하는 여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에서 활동을 시작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도 이러한 국민적인 기대에서 출발했다. 국민의 눈높이를 뛰어 넘는 혁신을 통해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기존의 우려를 불식하고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가고자 했다.

혁신위는 특히 불체포 특권 혁신, 출판기념회 금지 등으로 대표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오픈프라이머리(상향식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비판 받아온 국회의원 특혜를 제도적으로 내려놓는 방안을 고민했다. 또 폐쇄적인 정당정치에서 벗어나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II. 현황 및 문제제기

1.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1) 출판기념회 금지

—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 또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로비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지적

을 받아옴.

- 2012년 4월 11일 제19대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300명 중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출판기념회를 1회 이상 개최한 의원은 192명이며 총 개최 횟수는 279건. 19대 국회의원의 약 64%인 192명이 평균 1.4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셈.
-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통제 위주의 현행 정치자금제도를 선진국의 개방적 관리체제로 투명하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제기.

2)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 현행법은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원(院)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회가 임시회 또는 정기회기간에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
- 또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수당의 명칭과 수당의 실질적인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국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별활동비는 회기일수 기준에 따라 지급돼 폐회 중인 경우에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 참석에 대한 경제적인 유인이 없는 실정.
- 이 밖에도 세비 수준이 1인당 GDP(2450만원) 대비 5.6배로 주요 국가들보다 높다는 점, 국회의원의 입법성과에 관계없이 입법 활동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점, 수당과 입법 활동비가 국회 규칙으로 조정된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됨.

3) 겸직 금지 규정 강화

- 국회의원이 직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고 해도 반드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고 허용된 직 이외의 직은 절대 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국회의원 겸직은 의원들의 보호막을 이용하려는 각종 단체와 표를 얻으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의원들이 자신이 장이나 임원을 맡고 있는 단체의 뒤를 봐주고 그 대가로 이 단체들을 선거에서 전위부대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옴.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또한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나옴.

4)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선거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잦음. 지역 간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배정돼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문제도 생김.
- 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상시적으로 뒀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5) 불체포 특권 혁신

-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임기 중 형사소추를 면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개인비리 등 불법을 저지른 의원들의 방패막이로 악용된다는 비판 나옴.
- 실제로 뇌물을 받거나 선거부정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건국 이래 모두 55건이나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 가운데 12건만 가결. 절반 이상은 표결에 부치지도 않고 자동 폐기.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들은 잠시 구속을 피했어도 나중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
-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과 당 의원들의 내부 반성이 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혁신코자 하는 공감대 형성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체포·구속에 대한 특혜 시비의 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현행법의 일반국민에 대한 인신 구속 절차와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 나옴.

2.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 현행법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 그러나 아직도 정당의 공천과정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개방성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

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오픈프라이머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의 한 방식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지 외연을 확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천권 때문에 발생하는 후보자 간 갈등 또는 탈당 사태 등을 막을 수 있으며 시도부의 일방적인 공천권 행사에 따른 의원들의 자율성 상실 문제 등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음. 아울러 선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더욱 많은 유권자의 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음.
- 보수혁신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의원 129명 중 76.7%가 기존 공천 방식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도 80.6%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Ⅲ. 혁신 추진상황

1.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1) ‘출판기념회 금지’ 등 4개 혁신안

- 지난해 12월 11일, 혁신위는 △돈 받는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원칙 적용 △검직 금지 규정 강화 △선거구획정위의 외부기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
-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출판물을 팔거나 입장료를 받는 수익성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 또 출판물의 범위를 확대해 서예전, 사진전, 도화전시회 등 유사 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함.
- 서용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외부에 ‘의원수당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음.
- 민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검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검직이 허용되는 공익목적의 명예직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도 강화.
-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자의적인 선거구획

정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혁신안

- 1월 12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무기명에서 기명투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제출.
- 혁신위가 마련한 이번 불체포특권 혁신안은 국회 회기 중 피의자인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함.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출석할 수 없음.
-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구속집행을 위해 실시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기로 함.
- 이와 함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 지금까지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됨.

2.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 4월 16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
-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완전국민경선의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되,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는 정당이 복수인 경우에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등의 내용을 담음.
- 완전국민경선제는 2016년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해 정치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자 함.

IV. 결론

국민의 눈높이를 뛰어 넘는 혁신을 통해 뿌리 깊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국민과 화합하고 소통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범했던 보수혁신위원회가 출범 초 목표로 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냈다는 점이 뜻 깊은 성과라고 자평한다.

혁신안을 추진함에 있어 적지 않은 당내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혁 필요성에 대해 당 내부에서 공감대가 확산됐고 지금 혁신하지 못하면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아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혁신위가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혁신위 내부 활동은 공식적으로 4월 의총보고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다. 혁신안을 담은 법안 처리에 있어 여야 합의 등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목적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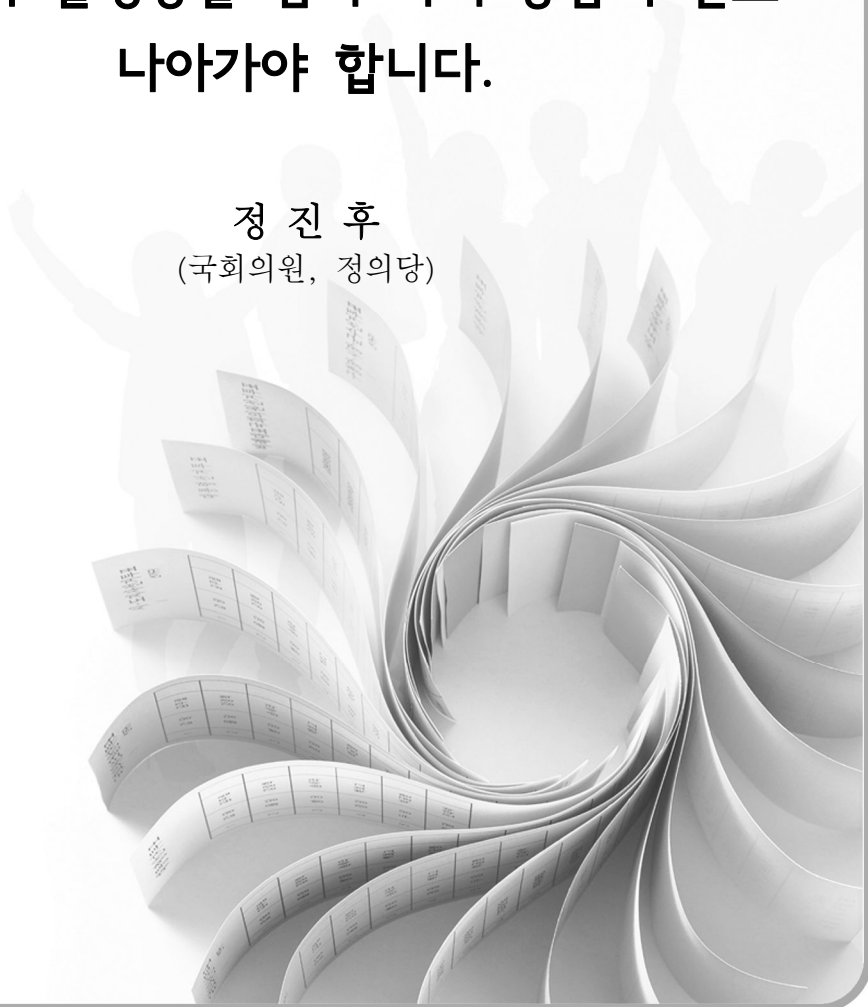
이번 결과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자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시발점이다. 제기된 혁신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앞으로 국민이 요구를 반영하는 혁신안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배려, 관용, 개인 간, 집단 간 가치가 공존하는 성숙한 속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토 론 문>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 진 후
(국회의원, 정의당)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진후(국회의원, 정의당)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고,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국내총생산(GDP)이 1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14위 경제대국이자, 교역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8위 무역대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늘 불안하고,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여 년 이상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노동시간 최장 국가, 수업시간 최장 국가 그리고 실업률과 비정규직 증가율이 높은 국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1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18위에 머물렀습니다. 많이 웃었는가, 피로를 풀었는가, 온종일 존중 받았는가, 하루를 즐겁게 보냈는가, 흥미로운 것을 했는가 등 일상의 행복을 묻는 질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밑바탕에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발독재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낸 거대 재벌은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며 나 홀로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반면 노동자·농민·빈민 등 경제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밀어닥친 무분별한 감세와 규제완화로 인해 양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단지 경제 영역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희망의 불씨들이 하나둘씩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졌고, 폐자부활전과 계층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횡포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한 대가는 사회 분열과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야 나갈 때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올려 소득주도 경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급 4.4달러로 OECD 25개 국가 중 15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액 또한 OECD 평균인 6.9달러에 비해서도 약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상용직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5.2%에 불과하여 비교대상 25개국 중 1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였으나, 2014년 현재 1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금 액수뿐만 아니라 임금불평등 수준 또한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계층(중위 임금의 2/3 미만) 비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 저임금 계층이 2001년 16.9%에서 2012년 16.3%로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24.2%에서 25.1%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임금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임금 10분위 배율도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4월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년 전에 비해 정규직은 1만8천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1천463원으로 1.8% 늘어나 임금증가율이 정규직 대비 1/3 에 불과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 연간 특별급여도 정규직이 542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33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12.2%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13년 6월 64.2%에서 지난해 6월 62.2%

로 떨어졌습니다.

저성장시대, 특히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소득주도 경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심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소멸된 상황에서 복지확대, 임금인상을 통해 아래로부터 (bottom-up)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임금 해소를 넘어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5,580원)은 가족의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의 생활도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시급 7,632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 전면 확대 실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예규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지침에도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2014년 기준 8,019원)의 87.745% 이상으로 입찰 받도록 하고, 입찰 받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시중노임단가를 약간 하회하는 금액이 사실상 최저임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정부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41.6%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정부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여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대하여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원으로 인상하여야 합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소비를 통해 우리 사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노동소득 증가율이 1% 오르면, 새로운 구매력을 창출하여 GDP 1%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비정규직과 서민의 돈이 도는 경제, 중소기업과 골목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책임복지, 보편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이러한 공약들은 모두 후퇴되거나 무책임하게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지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4.7%에 비해 6.0%p 낮아 OECD 35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중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B정부 출범한 2008년 이후 10년간 매년 수습조원의 재정적자가 반복되고 있고, 부족한 재원을 나라빚으로 메우다보니 300조원이 되지 않던 국가채무는 10년 만에 40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 규모와 조세 시스템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도 양극화에 대처할 수 없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급증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넘어 증세가 불가피합니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일보와 재정학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53.4%)의 응답자가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복지 확대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국민들 스스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세를 위해서는 ‘과정에서의 공평과세와 결과로서의 복지확대’ 원칙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능력에 따라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세금의 기본원칙이자 상식입니다. 또한 내가 내는 세금이 복지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내놓은 사회복지세는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온 대안입니다. 사회복지세는 소

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존 세목에 추가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의 복지목적세입니다.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라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를 보편복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면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아질 것입니다. 정의당의 안대로 시행될 경우 급여 3,400만원 소득가구의 경우 39,000원을 내고 1백만원(20조/1,839만가구=가구당 109만원)의 복지혜택을 누리게 되고, 급여 2억8,800만원의 고소득자는 복지세로 1,392만 원을 내고 역시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돌려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세는 지출 목적이 복지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믿음을 줄 수 있으며, 조금 버는 사람은 조금 내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낸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증세 방안입니다. 따라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보다 더 폭넓게 얻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복지재정이 대폭 확충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복지지출이 OECD 최저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에도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선진국형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양당 중심의 폐쇄적인 정치구조와 국회의 편향된 대표성으로는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세력만 대변하는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당에 비해 야당이, 여야 거대 정당에 비해 소수정당인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는 정치의 사회적 갈등 해결 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정당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만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전체 의석비율 중 18%(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표심과 무관하게 대량의 사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대정당은 지지율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소수정당은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의석을 배분 받는 문제를 발생시켜 국회가 다양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율과 의석사이의 불비례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1석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이 받은 평균 득표수가 열린우리당의 경우 6만9,439표였던 것에 반해 민주노동당은 46만114표에 달합니다. 이는 1위에 게 간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로 처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을 기반으로 둔 정당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에서 54.7%만의 득표로 전체 의석을 거의 싹쓸이(94%)하였고,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20.1%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의석점유율은 고작 4.5%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호남에서 민주당은 53.1%의 득표율로 75%의 의석을 차지하였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와 의석율을 연동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직능·계층의 대표성 강화와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보완한다는 점에서 현 국회의 대표성을 대폭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며, 전국 득표율 기준 2%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을 기준으로 의석배분 정당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석수가 배정된 이후 각 정당은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먼저 채운 후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도를 의석수 배분에 반영하여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가져오는 극한의 대결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입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1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세대·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지지도와 지역대표성을 국회 의석배분에 정확히 반영하여 비례성을 확보하고 의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 의석수는 300석으로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는 약 17만명에 달합니다. 인구수가 1억을 넘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원 1석당 인구수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국회의원 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효과적인 배

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200, 비례 100석의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46석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현실 기득권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선관위의 개혁안 제출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의원 정수가 모자랍니다. 정의당은 선관위 안의 취지를 살려 지역구 수를 240석으로 조정하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 수 비율 2대 1을 유지해 비례 의석을 120석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360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당의 의원 정수 360명 확대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보여준 어두운 행태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세금도둑’이라는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해서 총 비용을 동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인건비 등 국회 운영비용 총액을 현재 300명 규모로 유지하면서 의원 수만 360명으로 늘리면 산술적으로는 의원 1인당 가용 예산이 약 17% 줄어듭니다. 의원 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고 운전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은 과감하게 폐지하며, 해외 출장 등 의원 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함으로써 전체 입법부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 특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의당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쉽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23일 UN 산하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가 158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해 발표한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통합’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같은 재정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아이슬란드(2위)의 경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높은 신뢰가 행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신뢰가 부족해 행복도 순위가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노인,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등 이제까지 갈등과 대립으로만 여겨졌던 단어들이 신뢰와 통합으로 다시 써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이익을 공유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보정당으로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올 초 ‘비정규직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당 대회에서는 ‘현실주의 진보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처한 아픔에 우선 귀 기울이고, 커다란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사회복지세 도입, 선거제도 개혁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의당의 대안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현실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 론 문>

화합과 소통을 위한 언론의 역할
— 조희연 교육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의 겸
(관훈클럽 감사)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화합과 소통을 위한 언론의 역할
- 조희연 교육감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의 겸(관훈클럽 감사)

1. 들어가는 말

- 우리나라처럼 선거방송 토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 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
- 본격적인 티비토론의 시작은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때. 하지만 그 뿌리는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 차례로 불러. KBS MBC 녹화 중계방송.
- 관훈클럽 임원으로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회 참여 기회를 주셔서 감사. 조희연 교육감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의 선거보도 역할 얘기.

2. 조희연 교육감 사례를 통해 본 ‘사실’의 중요성

*** 판결문에 나타난 사건 전개**

- 2014년 5월24일 인터넷 트위터 상에 뉴스타파 기자인 최아무개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고승덕 후보는 자녀들을 어디서 공부시켰나요?...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 의혹 제기
- 2014년 5월25일 오전 11시께 조희연 후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고승덕 후보는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
- 고승덕 후보는 5월25일 오후 3시16분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미국을 방문해야 하나 10년 가까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 조희연 후보 5월26일 선거사무실에서 ‘고승덕 후보님께 드리는 답신’이라는 제목으

로 “고 후보님께서는 몇 년 전 공천에서 탈락하신 뒤 ‘상관없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다니셨다고 한다.”며 거듭 제기.

- 조희연 후보 5월27일 2회에 걸쳐 라디오 방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발언. 한수진의 sbs 전망대,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kbs
- 2015년 4월23일 벌금 500만원 선고 교육감직 상실 위기.

*** 언론은 무엇을 했나?**

- 교육감 후보의 영주권 적격 여부는 공적인 사항으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선출직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적격 검증을 해야. 객관적인 소명자료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
- 판결문은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정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하나, 입증책임을 너무 무겁게 지운다고 생각. 의혹은 후보가 제기할 수 있고, 그 검증의 책임은 언론에게 있는 것 아닌가?
- 사건 전개만 보면 얼마든지 중간에서 언론이 팩트 체크의 기능 수행할 수 있어. 특히 교육청 출입기자 수십명.
- 고승덕 명의 여권상의 미국 비자는 모두 영주권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 비이민비자. 미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제출한 외교노트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기록이 없다’ 간단한 사실 확인 가능.
-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정자로서의 기능 상실.

3. 선거방송 토론의 역할

*** TV토론의 긍정성**

- 정치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미디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효과적인 정견발표의 기회 제공
-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 받아
-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TV 토론이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 마당’이 될 수 있어. 그러나...

*** TV토론의 부정성**

- 정책과 정견에 대한 진지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나 사상에 대한 비

방과 인신공격의 장이 되는 경향

- 정치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결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를 조장
-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 민주주의에 역행.

*** 사실의 중요성**

- 선거보도나 TV토론이 참여와 숙의, 소통과 신뢰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실’
- 언론이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를 구별해줘야. 그 기초 위에서 토론이 이뤄질 때 공감대 형성 가능. 이런 기초적인 사실이 무시되는 정치지형 구도에서는 진영 논리의 답습만...

4. 미국의 팩트 체크

*** 2012년 TV토론 사례**

- 오바마와 롬니 대결. 12개의 채널과 유튜브로 토론 생중계
- 방송 중에 팩트 체크에 대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후보의 발언에서 나온 수치나 내용 등에 대해 관련되는 팩트를 거의 동시에 화면에 띄워줌으로써 후보의 발언내용에 대한 과장이나 진위여부를 바로 가려줘
- 티비토론이 끝나면 토론을 정리해주는 후속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 누가 토론의 승자인지 패자인지를 떠나 토론에서 나온 발언들을 비교 평가. 토론의 완결성을 높여.

*** 미국 팩트 체크 사례(마동훈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자료)**

1)언론사 내부 독립기구 모델

- Politifact.com (Tampa Bay Times)
- PolitiFact Truth Index (眞實 指數)
- 모든 발언을 6등급으로 분류하여 점수 배정
- True (진실), 20
- Mostly True (대체로 진실), 10
- Half True (절반의 진실), 0
- Mostly False (대체로 허위), -10
- False (허위), -20
- Pants on Fire (새빨간 거짓말), -30

2)대학 독립 연구기관 모델

- Factcheck.org (Univ. of Penn)
-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의 전문 경영 및 집필진 10명과 학부생 펠로우 5명으로 구성
- Annenberg 재단 기부금과 기타 고액, 소액 기부금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재원

3)언론사 내부 조직 모델

- The Fact Checker (Washington Post)
- Washington Post 저널리스트 Glenn Kessler 중심 1인 fact checker 시스템
- Fact checking 대상 정치인/여론지도층 발언
- 공표 방식 (Fact Checker, Washington Post)
- On-line 및 off-line 고정면 Fact Checker 컬럼과 평가결과 제공

5. 우리의 현실

* **우리나라 신문 방송 선거 보도의 문제점** (이준웅, 캠페인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제언) 수많은 가운데 몇가지만 언급하면...

- 후보의 공식적인 발언, 공약, 정책 등에 대한 사실 검증의 미약
- 질적인 편파
- 후보들의 부정적 캠페인의 대변인 노릇하기
- 근거없는 추측성 보도 남박
- 기자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윤색하는 인용
- 부정부패 선거 무관심 선거 방조

* **이유**

- 취재인력의 부족, 제한 지면이나 시간 ; 인신공격이나 비방 등 부정적 캠페인,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적 공약 등을 불공정시비 무릅쓰고 모두 검증할 만한 취재인력이나 시간 부족
- 기자들이 정당 출입처에 기반을 둔 선거 취재과정의 문제
- 더 중요한 건 언론의 공정성. 판정자 기능 약화. 이는 한국의 언론들이 당파적 성향을 많이 띄는 현실.

6. 제안

* 언론사간 협조 모델을 구축하자

- 보수, 진보, 중도 등 다양한 언론사 참여.
-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학자 연구 병행
- 중앙선관위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재정적 지원(?)
- 가장 기초적인 사실 여부를 공동 취재와 토론을 통해 확정.
- 상대방의 주장에 귀담고 자신만의 논리 강변하는 현재 정치 지형,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불가능한 현실 극복하는 첫 단추 기대.
- 활동이 좀 더 고도화되고 취재 영역이 넓어질 경우 단순한 사실 여부를 떠나 후보자의 정책 및 능력의 우열을 가리는 정도로까지 진전될 수 있어.

* Fact Checking 대상(내용)

- 정치인/여론지도층의 기자회견, 강연,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내용
-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 광고 내용
- 신문, 방송 등을 통한 정치인/여론지도층 발언 내용
- SNS, 팟 캐스팅 포함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인/여론지도층 발언

<토 론 문>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여성계의 의견

김 성 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여성계의 의견

김 성 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오늘 성숙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대토론회를 마련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한국언론학회에 감사드리며 우리사회 분열을 예방하고 사회 대통합을 이루는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사회에 깊어지고 있는 갈등을 보면 계층갈등(41.1%), 세대갈등(33.8%), 이념갈등(30.7%), 노사갈등(29.9%), 지역갈등(29.2%), 정부-정부갈등(17.2%), 정부-주민갈등(16.8%)의순으로 조사되고 있다(윤인진, 2014). 그러나 여기서 남과 여의 성별갈등은 위의 심각하게 인식된 사회 갈등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 간의 갈등이 먼저 해결 된다면 앞에 열거한 사회 갈등 해소는 가속화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사회적 권한, 삶의 질 등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은 비단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책임으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김정숙, 2014).

2014년 세계 경제포럼(WEC;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국가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42개국 중에서 117위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비해 아주 낮은 순위에 있다. 양성평등 순위를 낮추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인 의사결정기구와 정치 분야에 있어서 여성참여 부족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제이다.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46년 동안 한국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선각자들의 소명의식으로 여성의 인권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의식,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변화가 왔다.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여성의 인권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법률이 도입되어 여성발전을 이끌어 주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새롭게 마련할 제도와 개선해야 할 행동강령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다.

이제 우리 여성계는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담론이 ‘여성이 국가의 성장동력’이라는 21세기에는 우리 여성들의 섬세한 감성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여성계와 학계, 정계와 기업 등 사회 전반의 역량을 이끌어 내어 우리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여성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세상 만들기에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그 중심에서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1. 정치관계법 · 제도 개혁-지역구 여성할당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우리 연맹을 포함한 여성계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가 ‘남녀동수법(La Parite)’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냈던 것과 같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혜린(2006, 11)의 지적대로 “여성들이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수적인 대표성의 확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참여, 가치 및 덕성을 담지하는 ‘시민성(citizenship 혹은 civility)’을 확보함으로써 여성들이 실질적인 힘의 증진(Empowering)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김형준, 2015).

여성할당제는 UN을 통해 그 정당성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표성에서 남녀동수는 여성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구성에 관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김은주, 2014).

남녀 성 구성비를 대표하는 대의(선출의회)의 차원에서 성비의 절대적 격차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 정당정치 구조 변화와 그를 통한 여성동수정치 실현은 야당제도 개선(소수 정당 진입) + 비례 확대(국회의원 수 증가) + 세비 동결을 통한 방법이 최대 함수라고 하였다(오유석, 2014).

새마을 운동의 남녀 지도자는 동수를 위한 정치 전략으로 재 사유될 수 있는 중요한

한국 사회의 공유된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를 늘려 여성의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심상정, 2015).

아래로부터의 공천도입 시 지방토호세력의 정당장악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내 부 경선 및 투표에 대한 중립기구의 관리와 감독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선거를 통해서 상향식 공천 제도가 여성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한 제도임을 확인했다(박명림, 2014).

우리 연맹에서는 김정숙 회장, 유승희 의원, 김원홍 박사, 육동일 교수, 이기우 교수 등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처럼 남녀동반선출제를, 궁극적으로는 ‘남녀동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 성 평등을 위한 정당의 책임과 의무 강화 - 공직후보, 당직에 여성할당 의무조항으로

프랑스의 경우, 2000년 남녀동수법 도입 등 헌법과 선거법에 여성할당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 비율은 2014년 12.2%로 하위권(66위)에 머물러 있다(김민정, 2014). 이에 비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은 법적 장치 없이 정당 차원에서 당헌, 당규를 통해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여 40%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정당이 스스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해 준다.

각 정당의 당헌 당규 개정과 여성공천비율 확대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여성계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사회 현안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복지,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모습과 깊이 연관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는 여성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문제 해결에 여성의 시각과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행정은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가정을 경영한 노하우를 지닌 여성의 힘이 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생각에는 누구나 동의 한다.

따라서 정당별로 지역구에 여성 30%이상 의무공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30% 이상 확대, 그리고 여성후보에 가산점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3. 여성유권자의 투표참여율 및 정치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선거에서 사회의 다수자로서 여성의 투표참여가 늘어날수록 여성당선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여성정치인이 증가할수록 여성관련 정책이나 입법 제정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김형준, 2011).

송경재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투표에 대한 사회 변화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으며($p < 0.1$), 비습관적인 시민참여에도 적극적인 것($p < 0.05$)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여성이 여성후보에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이는 좋은 후보가 있다면 여성 후보에게 여성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여성후보가 많아지면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권리의 향상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송경재, 2014).

4. 여성 정치인의 연대 강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성 평등 문화가 뿌리 내리고 정치와 저변 사회문화가 연동되어 사회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 여성의원들과 우리 여성계가 한 목소리로 성평등 문제를 중요한 사회 어젠다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여성정치인의 연대 강화는 물론 여성정치인과 여성계가 힘을 합하여 민주주의 구성에 관한 문제인 성 평등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회에서 여성운동을 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대표가 되는 여성 의원들은 정당을 넘어 협력하여 성 평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인터넷과 SNS의 적극적인 활용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효과로서 여성의 SNS 활용은 정치에 관심을 높이고 정치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 될 것이다. 현재 ICT 효과는 주로 야당 지지집단에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오프라인의 정치적 역학구조가 온라인화 되는 정상화

(normalization)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ICT를 활용한 여성에 대한 정치적인 소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드웁(Chadwock 2006), 프레이저와 두타(Fraser and Dutta, 2009)는 인터넷과 SNS의 등장이 정치의 진입장벽을 확연히 낮추어 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권자 간에 그리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치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지지자를 인입시키며, 자신의 목소리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개인 미디어가 SNS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성을 활용하여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SNS 활용의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예컨대, 여성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 포털이 이미 활성화 되었듯이 여성 SNS를 활용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6. 여성후보 발굴 및 인력풀 활용

조직과 자금, 인맥에서 취약한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로 여성계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 연맹에서는 청년리더십 프로그램과 국회인턴 프로그램을 올 해로 16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번의 경우로 보면 학력, 경력, 능력 등이 매우 우수했고 열정도 대단했다. 국회의원들이 인턴으로 받아 주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청년들과 DMZ (Demilitarized Zone: JSA)를 방문하면서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여성단체들이 단결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정치박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여성정치인이 그들의 활동을 알림으로써 정당과의 네트워크를 돈독하게 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향후 유권자와의 만남도 기대할 수 있다(김원홍, 2015).

여성의 사회적 자본을 높일 수 있는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교육적 노력을 함께 해 가고자 한다.

7.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해법 찾기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육아 보육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방연맹을 중심으로 가족친화기업 현장 방문 및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한다.

가족친화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워크숍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여성가족부에 우수 가족친화기업으로 추천한다(시설 개선 자금 보조, 금리 우대, 세무조사 3년 유예, 대표 출입국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8. 통일 준비를 위한 청소년, 청년, 일반 유권자 교육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유권자프로그램’, ‘국회인턴프로그램’, ‘차세대 정치리더 캠프’, 그리고 ‘청소년정치캠프’를 열어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눈부신 미래를 펼칠 수 있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들이 나눔과 배려의 소양을 갖추어 세계 지도자가 되는 인성교육의 장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연맹 활동을 확대하여 이주여성유권자들에게 그들의 비전이 새로운 조국에서 실현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2015년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원년으로 법, 제도가 선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위하여 우리 연맹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재 양성을 할 것이며, 이들이 차세대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멘토들과 네트워크 결성, 지속적인 교육을 해갈 것이다.

[부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연맹의 활동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에 창립되어 올 해로 46주년이 된다. 여성의 민주 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양성평등 의식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 3대 활동 목표를 통하여 참된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여성지도자교육, 여성유권자 교육, 의정모니터링, 차세대 지도자 교육(차세대 정치리더 캠프, 청소년 정치캠프), 다문화 유권자 교육, 매니페스토 실천 점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여성후보자 발굴 및 지원, 여성인재뱅크 운영, 공명선거 활동, 각종 선거법, 정치개혁 관련 입법 제안 활동 및 정책개발, 여성 정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유권자연맹의 목표를 실현해 가고 있다.

1.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여성계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위한 운동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가속화에 힘입어 여성운동 또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가족법 개정 등의 성과를 얻자 대선을 앞둔 1987년부터는 가장 낙후된 분야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 운동을 시작하였다.

- 1987. 12. 10.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여성 10-15% 할당 건의
- 1988. 1. 20.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회의원 10% 할당제 실시 건의
- 1989. 10. 7. 국회 및 각 정당에 10% 할당제 채택 건의서 제출
- 1990. 2. 28. 여성 의석할당제 건의
- 1991. 3.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예 여성할당제 포함 건의서 발송
- 1992. 4. 연맹과 4개 여성단체 연합토론회에서 20% 할당 건의
- 1992. 8. 임명직 10%/전국구 20%/지방의회 30% 이상 여성 공천할당제 실시를 제안
- 1993. 11. 10개 여성단체와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을 결성하여 할당제 조항을 정치관계법에 포함하도록 요구
- 1994. 2. 본 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전문직여성클럽(BPW), 등이 각 정당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1994. 8. 56개 여성단체가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여 지방선거에서 20% 할당을 촉구
- 2000. 4. 6. 본 연맹,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한나라/자민련/민주국민당을 대상으로 정당법(30% 여성공천) 위반에 따른 공천효력 가처분 신청

이러한 본 연맹과 여성계의 제도개혁을 향한 줄기찬 연대 노력으로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고(30%), 이에 따라 여성의 정치 참여가 할당제 도입 이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1981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 3.3% -> 2015년 현재 15.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평균 21.8%를 밑도는 수치로 2014년 국제의원연맹에서 발표한 '2014 여성 정치인지도'에 따르면 그 순위가 90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2013년 10월 아시아재단 후원으로 방글라데시 국회 직원, 여성단체장, 시민단체장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연맹과 좌담회를 가졌다. 놀랍게도 그들의 여성의원 진출이 우리를 앞섰으며, 우리의 활동 내용을 들으면서 여성할당제면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제도 개혁

- 2000. 2. 8. 정당법 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여성 공천 명시
- 2002. 지방선거, 광역의회에 비례대표 할당제 실제 도입
 - 광역의회 비례대표 50% 여성의무공천, 위반 시 정당명부 등록 무효
 - 광역의회 지역구 30% 정당공천 권고/준수 정당에 정치자금 인센티브
- 2004.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할당제 도입
- 2006. 지방선거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 50% 여성의무공천
- 2010. 선거구별 여성후보 의무 공천, 위반 시 후보등록 무효

참고 문헌

- 김민정, 2014. 프랑스의 남녀동수운동과 시사점.
- 김원홍, 2015.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2015년도 여성 정치참여 워크숍 발표문,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 김은주, 2014. 동수민주주의를 논쟁하다, 개회사
- 김정숙, 2014. 지방선거 양성평등한가?,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토론회발제문.
- 김형준, 2011. 한국 여성정책 고찰과 패러다임의 변화,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토론회 발제문
- 송경재, 2014. 6·4 지방선거에 나타난 여성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참여형태 분석.
- 윤은진, 2014. 한국사회갈등의 지형과 변화,
- 오유석, 2014. 동수민주주의의 확대 전략.
- 이준한, 2014. 6·4 지방선거 양성평등한가? 토론회 발제문.
- 이진옥, 2014. 성차와 상보성, 여성은 누구인가, “동수민주주의를 논쟁하다”, 토론문.
-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00.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30주년 기념 여성유권자운동과 정치발전, 시공사, 177~497.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이 희 숙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이 회 속(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I. 서론

안녕하세요?

이런 뜻 깊고 정중한 자리에 초대되어 대단히 설레고 감개무량한 마음과 또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짧은 소견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경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1993년도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6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근무하다 2010년에 다문화센터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식당 알바, 이마트 알바, 생산직종에서 잠깐 근무하다가 체불임금의 아픔도 맛보고 남편 현장 하숙집도 운영 하는 등 안 해본 일 없습니다. 참 많이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벌써 22년이 되는군요. 우리나라는 이주민들의 증가로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라는 글로벌 문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주란 내가 태어나 생활하던 고향에서 낯선 환경으로 들어와 거주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는 것을 타향살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적응이며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저는 타국의 이주민이며 언어와 문화, 풍습 모든 면에서 전혀 낯선 이방인으로써의 생활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희 다문화가정을 예로 들어 여러분들과 다른 견해, 관점 또는 모순들과 오해로 인한 차별, 아픔, 반감 등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 진실된 토의를 가지고자 합니

다.

여러분들과 다른 생각, 인지 때문에 불쾌함과 물의를 주었다 하더라도 저의 입장에 서의 생각이고 관점이니 고의가 아님을 정중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II. 이주민의 실태와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제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이주민 문제점은

첫 번째 : 언어소통

두 번째 : 생각의 차이

세 번째 : 자녀양육문제

네 번째 : 경제적 소외계층

다섯 번째 : 20년 뒤의 다문화 가정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부역할 역전 문제

여섯 번째 : 자존감 저하

일곱 번째 : 우리사회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언어소통 장벽으로 부부간의 소통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많은 오해와 부부간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하며 서로의 진실된 마음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 서로에게 불신을 가져다주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 가출, 불신, 불만들이 속출하여 결국엔 가정파탄에까지 이르는 경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갔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자신의 주문이나 의사를 전달 못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그 답답함과 조급함을 적게나마 이해하고, 그만큼 언어의 중요성도 각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무지로 본인이 위축되고 남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속으로 삭이다 보면 마음이 불안정하며 짜증이 나고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하게 되지만, 만약 극복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을 포기하게 되고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되어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착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월등히 높고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제결혼이 어렵고 불안하며 한국가정들보다 더 많은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생활을 하는 가족들의 배려와 이해 그리고 존중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인내와 인도로 이주여성들을 대하다 보면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그 결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어떤 어

려움이 닥쳐도 꺾이지 헤쳐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전국에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통번역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각차이입니다. 부부간에 나이차이가 많다보니 생각차이가 너무 심하여 공통점 합의가 되지 않는 것 또한 불신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의 소통은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에게 끌림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움으로 발전하고, 연민으로 승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의 세대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부부사이가 부녀사이로도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간 생각 차이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하시는지요?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시대에 태어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서로 소통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다가가야만이 원하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며 믿음과 신뢰가 형성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라도 세대차이가 있으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여려고 하는 욕구가 상생되기보다 본인의 의지와 생각을 주장하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특히 부부는 서로 제일 가까우면서도 제일 먼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좋을 때는 네 것, 내 것 없이 너그러움과 포용이 이루어지지만 일단 서로에 대한 신뢰나 믿음 또는 이해가 없을 시에는 누구보다도 원수처럼 무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종종 주위에서 접하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혼이라는 최후의 단계까지 가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전략하곤 하죠. 세대 차이는 단순히 생각차이가 아닌 소통불화의 시작이며, 동시에 이해와 포용의 출발점이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작점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풍요가 더욱 위력 있고 그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즉 정신적인 공유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게 하고 ‘함께’라는 단어를 연상케 하는 매력 있다고 봅니다. 부부는 이런 정신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을 한다면 물질적인 어려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결론적으로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게 믿음의 장을 제공한다면 모든 부부들은 행복과 평온을 찾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자녀양육은 제가 한국을 택하고 향하려 할 때 제일 염려되고 자신 없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던 사회에서 접했던 것들을 나의 분신인 자녀들에게 전달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데, 아무 경험도 정보도 확인되지 않는 문화와 교육을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여 깨우침을 준다는 것은 일종의 무모함이며 도박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들이 3~4살이 될 때 이웃 엄마의 권유로 ‘빨간펜’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부터 접근하며 진행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다른 사회에서도 엄마의 마음은 똑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펜’에서 2년 근무하며 번 돈 천여만 원을 모두 아이들 책 구매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남편에게는 거짓으로 가격을 절반 이하로 알려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책을 아이들에게 읽어 주면서 같이 웃고 행복해하며 즐거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제 딸을 36개월에 미술 학원을 보내면서 한글을 깨우쳤고 책을 줄줄 읽혀서 보냈습니다.

제가 첫 딸을 어렵게 5년 만에 낳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고 17개월이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책을 다 외워서 흉내 내는 모습을 본 그 기쁨은 평생 잊지 못 할 겁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는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 제 딸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어장벽이 있는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 볼 때 참으로 조바심나고 안타깝고 이주여성들에게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도록 용기와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음교정은 제일 까다롭고 쉽지 않은 문제점입니다. 다문화 자녀들이 언어발달에 문제가 되고 학습이 또래 아이들보다 늦은 이유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이런 2세를 위해 우리 이주여성들은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보다 두 배 ~ 열 배의 노력을 해야 하며 본인들의 자녀가 이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무정하고 예의 바르지 못한 버릇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첫 번째 선생님은 당연히 부모라고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고 특히 인성교육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품은 어릴 적부터 형성되며 이는 부모님들의 영향이 많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부 쪽으로 잘하고 우등생이 되면 좋겠죠. 허나 한 인간의 인성이 좋고 나쁨은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치며 주변의 인간관계를 좌우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문화자녀들에 대한 우리나라 학교와 사회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들이 과연 그렇다고 할 수 있는지를 논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다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마치 다문화는 가난하고 소외계층이고 도움을 줘야하는 가정이고 이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여 많은 단체나 기업들이 다문화 사업에 동참하고 지원후원하며 많은 애정과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을 모아서 체험활동을 통해 관람한다던가 아니면 전국 각지로 모아서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진정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배려인지 사랑인지 신중히 생각을 하고 진행하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가는 곳마다 현수막에 다문화자녀 뭐~뭐라고 써진 글자를 보이게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아이들의 의사 동의를 거치고 하는 행위인지, 아이들이 진정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참하는 것인지를 누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의도에서 다른 출발점에서 대우를 받고 참여를 한다면 과연 그 아이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며 왜 나는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된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원하는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분명 후원이고 지원이니 좋은 뜻에서 하는 일들인데 왜 이런 불쾌한 질문들을 하고 생각을 할까 의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다문화자녀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가정 아이들과의 화합을 원하고 있는 것이며 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다문화자녀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데서 하는 것 입니다.

분명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여러분들 아이들과 똑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자녀라는 타이틀을 줘서 그들에게 소외감과 별개로 어두운 그림자를 줘야만 다문화사회를 증명하는 것인지 너무나 흥분되고 분개되며 있어서는 안 될 옛날 일제 식민지시대 때의 그 아픈 과거를 생각하게 되어 이래야만 되는지를 속 시원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다문화사회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것이지 다른 관리를 하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다른데서 공통점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면에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이라 생각되면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진정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함께 하며 공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훨씬 월등한 문화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두 나라의 문화와 풍습 및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들을 양성, 발전시켜 두 나라의 가교역할분야에 양성시킨다면 두 나라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인재와 가치라 봅니다.

네 번째 경제적 소외계층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또는 다문화 가정을 이룬 우리 남편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은 단지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 세상을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문화가정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다문화가정들이 왜 우리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들을 보면 다문화가정을 이루기 전부터 남편들이 이 사회의 소외계층이었고 거기에 이주민여성이 결합하면서 소외문제가 부각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이주민 문제를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떤 정책들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뒤 그에 대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다문화 정책들이 보이는 것만 보고 근본적인 원인 파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본다고 봅니다. 다문화 소외계층들을 지원하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이 진정으로 이들을 구하는 것이며 경제적인 밑바탕이 이루어져야 만 이 자녀교육 가정화목을 이루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014년 4월 28일 한국이주민여성유권자연맹 이라는 단체를 어렵게 창립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탄생한 한국이주여성유권자단체가 많은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인터넷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희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불신의 댓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렇게 냉랭하고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허무했습니다. 제가 한국생활 22년 동안 긍정 또 긍정으로 살아왔지만 저의 존재의 가치와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하루였습니다. 기쁨을 만끽하기는 커녕 외롭고 씁쓸한 마음을 어떻게 주체 할 수 없을 정도로 낙담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역경들이 저희로 하여금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게 하는 원동력이라 믿고 오뎅이처럼 거센 힘에는 더 큰 동력으로 일어서는 정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력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이며 의지이고 어려운 시절의 그 험난한 곤경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기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한 번 더 믿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소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짐, 부담이 아닐 겁니다.

다섯 번째 20년 뒤의 다문화 가정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부역할 역전 문제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하면 부부간의 나이 차이를 제일 많이 대면하고 있을 텐데요.

이 또한 20년 뒤 다문화가정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 남편들의 나이가 이주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이룬 남편들은 거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출산하다 보니 지금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50대 후반 60대에 들어서게 되면 가정에서 자녀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경제적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고 많은 기업들이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은 모두 기피하는 제3의 직업 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또 한번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즉 다문화 가정이 소외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모든 가정에게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생활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사회는 지금부터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과 지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들에게 자립과 상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가정에게 평온과 행복을 가꾸어 가는데 보조 역할과 협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역량과 장점들을 바라보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200여개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관에 종사한지 5년째인데 아직도 물가 상승률을 무시한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교활하게 노동법 규정을 피해서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여 차별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에게 많은 실망과 회의를 갖게 만들고 있으며 이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여 운영되는 기관이고 대한민국 정부대표 인권 기관이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배가 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사회와 융합을 하려는 이주여성들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조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제의하고 권유를 해도 개선은 되지 않았고 역으로 돌아오는 저에 대한 더 나쁜 대우에 실망 또 실망 했습니다. 기존에 가졌던 이 사회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가 이제는 절망까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규정과 도의에 어긋나는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단지 한국사회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마저도 짓밟히고 부정당하고 결국에는 포기란 단어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문화센터를 접하기 전에는 한 번도 내가 이방인으로 차별을 받고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럼 그렇지” 하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대

한민국 엄마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고운심성, 참된 인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적은 수입이지만 주말 알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하려고 애썼으며 힘들 줄 모르고 앞만 보고 왔습니다. 저의 이웃에서는 저를 억척이라고 합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문화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제 딸은 강원대 영어 영문학과를 입학했는데 제가 중국 상해 외국어 대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저의 자존감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다문화 여성들이 이런 뚝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지키며 스스로 자립하고 성장하여 이사회가 인정하는 그날을 향해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에 들어서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만이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상대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받아들여지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내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단일민족 국가에서 수많은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색다른 문화와 종교, 생활풍습, 가치관이 상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이러한 변화가 사회 각계각층에 끼치는 영향 또한 다양해 질수 밖에 없는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 세계화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사회 풍토와 문화 환경을 바뀌게 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로 진출, 화합하는데 상당한 가교 역할과 소통의 장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증명되어 가고 있으며 부정 불가한 현실이기 때문 입니다. 이런 가치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사회와 공유하고 화합을 이루고자 작년 이주여성유권자연맹을 창단 설립했던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근무 중 월차를 투자해가면서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많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종사했던 분들의 격려와 축하 속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창단식을 올리고 한국 사회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차려준 또는 환경에 매료되어 있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장과 욕구를 이 사회에 알리고 요구하고 쟁취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정받고 이 사회와 융합점을 찾아 함께 노력하여 최상의 환경조성과 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더 이상 이 사회의 소외계층으로만 머물지 않고 나아가 이 사회를 이끄는 주력으로 발돋움하여 다함께 단합하는 글로벌 사회로 발전하는데 작지만 중요한 율활제 같은 가교역할을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문화자녀들이 여기의 주인공이 되어 두 나라를 이어주고 발전하는데서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간곡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문화사회의 가치이며 위상이고 화합입니다.

이런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선진국가로 거듭나기에는 우리 우수한 이주여성들을 활용 투입하여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데 작은 도움을 주게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다문화센터와 같은 정부기관이 버젓이 당연시 차별행사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편견과 차별이 없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한 개인 개인 모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가치가 인정받고 그 가치가 빛을 보고 화합과 공유로 상생하는 그런 사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Ⅲ. 유권자와 선거

위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유권자대토론회와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권자란 무엇이며 선거란 또 무엇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주민들이 유권자와 선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주생활을 하다 보니 이주하고 있는 제2의 나라에서 유권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15조가 개정되면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올해까지 3번째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셈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4년 4월 현재 영주권을 가진 전체 외국인의 숫자는 104,000여 명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외국인 유권자는 4만8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갖게 된 결혼이민자와 일반귀화로 국적을 취득

한 이주민까지 포함하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3%대를 넘지 않았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주민의 투표율이 한 자릿수의 저조한 성적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해마다 선거연수원에서 센터를 방문하여 유권자란 무엇인지, 선거란 무엇이며 왜 선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1회 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신 관계로 각자의 선거 문화도 다르고 추구하는 욕구도 달라서 그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주위에 있는 다문화여성들을 데리고 선거에 동참하지만 누구를 찍을지, 왜 이 후보자를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전혀 없다보니 선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 하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알아보고 후보자들의 홍보물을 샅샅이 훑어 보지만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홍보물 밖에 없고 그 이외의 정보는 전무하기 때문에 홍보물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이해도가 낮다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나 주위 지인들의 권유로 후보자를 찍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들이 아직까지 한국에 대한 애착이라 해야 하나 그리 선거에 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나오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아직 한국 정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나오는 별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본인들의 욕구를 사회에 반응하는 것보다 한국사회의 체계에 맞추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사회 적응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무나 선거에 대한 중요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4년 4월28일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1년의 정치리더의 교육을 통해 전국 각 지역에서 30여명이 참여하고 이수하여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면서 어렵게 우리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을 창단 설립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다문화사회 경험을 30년 정도란 긴 세월을 통해 해 왔으며,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글로벌 국가로 거듭났음을 인지하여 최초로 이주여성 **이자스민 국회의원**을 배출했으며 **경기도시의원 이라의원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이주여성유권자연맹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탄생한 만큼 많은 불심과 장벽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구를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공유하고 치유하며 최선의 방도를 강구하면서 이사회에 융합을 도모하고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다문화 사회든, 정치든, 선거든 모든 일들은 진실 되어야 하며 현실과 동일한 한 몸체가 되어 어떤 정치를 펼쳐야 국민들이 안정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하며 의사가 처방전을 제대로 내여 환자를 완치시키는 것처럼 한 치의 착오와 오판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주민들 본인들이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정책들이 본인들에게 제일 유익하고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도움과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사회도 안정되고 자녀들도 평온을 찾을 수 있으며 이 한국사회와 잘 융합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세계화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다문화가정은 사회에서 소외계층이고 가난하고 배제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다문화이주여성들도 진정한 이사회리의 주인이 되어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뜻 깊고 상징적인 뜻을 지니게 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주민들도 유권자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선거를 통해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들을 강구하여 함께하는 세상, 공유하고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이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만들어 내고, 국민들의 문제점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며 이로 인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행복해지는 정치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IV. 맺음말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지원의 대상이 아닌, 다문화센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진정한 민주국가의 주인공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또 기원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게 되면 “외국인 집단이 이익 집단화될 경우 일자리 등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우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성숙된 이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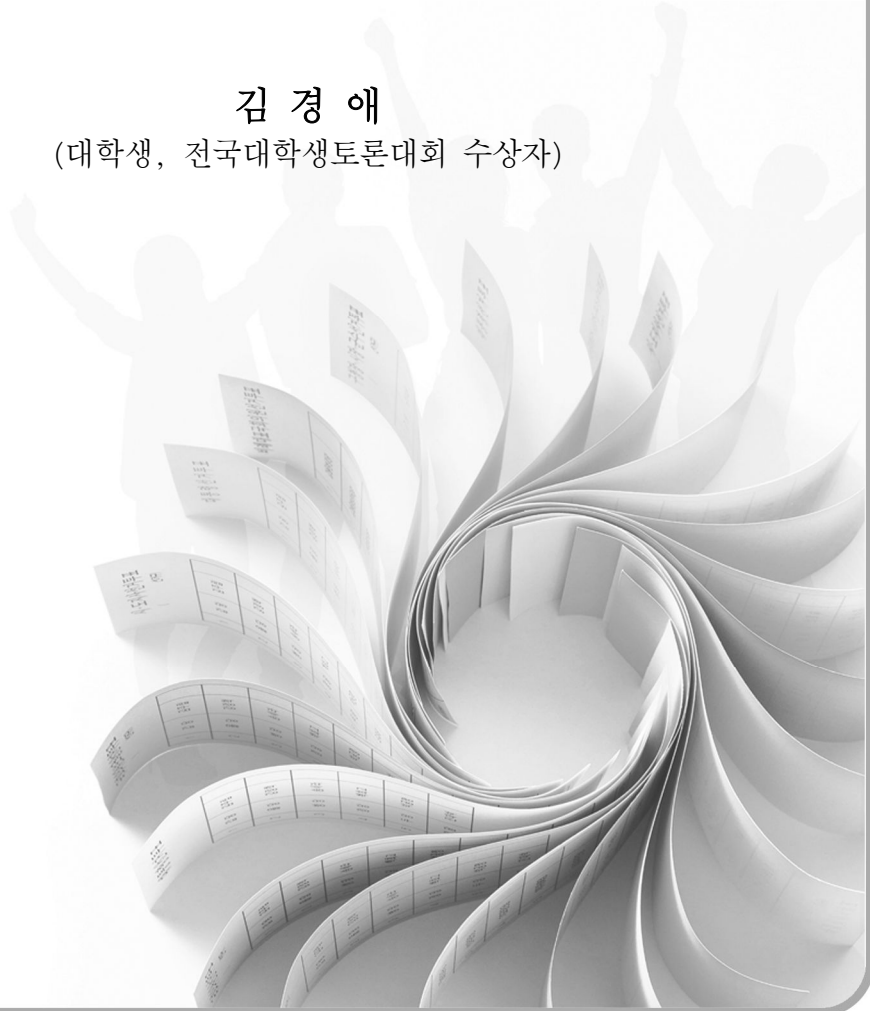
두서없이 말씀을 올리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고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김 경 애
(대학생,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자)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김 경 애(대학생, 전국대학생토론대회 수상자)

I. 들어가며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0.9%⁸⁾,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5년 2개월⁹⁾.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층의 대다수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단순히 ‘일부 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대학생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만들거나, 사회 전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학생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부를 대물림하고, 계급의식을 끊임없이 재생산하여 계층 간의 갈등을 고착화한다. 대학생들 비롯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취업난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성세대와 새로이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하며, 더 나아가서는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저출산·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학생 사회에 만연한 사회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갖추어야 할 젊은 세대의 갈등 해결 능력을 약화시키며, 지성인이자 사회 변혁의 원동력으로 기능했던 과거와 같은 대학생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8)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등)에 진학한 비율은 남학생 67.7%, 여학생 74.6%, 전체 평균 70.9%로 조사되었다.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지표」.

9)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 2개월로, 남자의 경우 6년 4개월, 여자의 경우 4년 4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3년제 이하 대학까지 포함한 대학 졸업 평균 소요기간은 4년 1개월을 기록했다.

통계청,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4.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학생 집단 내부의 갈등 및 대학생과 사회 간의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즉, 대학생이 주요한 소통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학생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가.

SNS(Social Network Services/Sites)를 포함한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담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해내고 있다. 인터넷 상의 공론장(公論場)에서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의견 제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생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사회참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대학생의 정치 담론 형성은 몇 가지 굵직한 이슈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뉴스가 아닌 이슈들에 대해 무관심하며, 대학 졸업을 앞둔 무렵 취업 준비를 위해 평소에는 등한시했던 시사 상식을 책이나 강의로 한꺼번에 보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실 정치에 대한 대학생의 실질적 참여도 또한 매우 낮다. 인터넷 공간을 벗어난 현실의 대학생 사회에서 정치에 관한 토론은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인 각종 공직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¹⁰⁾으로, 대학생의 의견을 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달성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정치 참여에 대한 대학생의 소극적 태도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집단과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1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06.04. 시행)에서 20대의 투표율은 48.4%로 60대 74.4%, 50대 63.2%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20대 후반의 투표율(45.1%)은 20대 전반(51.4%)보다도 낮게 나타났으며, 20대 전반의 투표율이 더 높은 것은 군 복무자의 사전투표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2014.

II. 대학생 및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

1. 사회 구조적 문제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에 걸친 젊은 나이를 ‘청춘(靑春)’이라고 부른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만물(萬物)이 푸르른 봄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춘’들의 삶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과는 거리가 먼 듯 보인다.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연평균 등록금은 667만원¹¹⁾,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40만 9000원¹²⁾이다.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 속에서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를 경험¹³⁾한다.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약 73.3시간,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려 597.7시간을 일해야 한다.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다.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업을 이어나간다. 결국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 5명 중 3명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을 안은 채 졸업¹⁴⁾하게 된다.

이처럼 어렵게 대학 과정을 마친 청년들 앞에는 ‘취업난’이라는 또 하나의 큰 벽이 기다리고 있다. 매년 40만~50만 명 정도의 대학졸업자가 배출되지만 이들이 주로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 등의 채용규모는 10만개도 채 되지 않으며, 대졸 취업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을 구하고 있다¹⁵⁾.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은 그저 누구나

11)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정보 사이트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공시한 정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의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67만원으로 전년 666만7000원 대비 3000원 늘었다. 대학별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이 90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866만600원), 을지대(850만1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2) 구인구직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3월 전국의 29세 이하 대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40만9000원으로 지난해 40만8000원에서 1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 해 11월 전국 남녀 대학생 1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3%가 ‘최근 6개월 내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주당 6.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구인구직 전문포털 잡코리아가 2015년 대학 졸업생 10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4%의 졸업생이 빚을 떠안은 채 졸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규모는 평균 1321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작년과 비교할 때 부채비율은 59.6%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채 규모는 1275만원에서 증가한 것이다.

15) 지난 2012년 대졸 취업자가 첫 일자리로 정규직에 진입한 비율은 61.3%로, 2011년 66.9%보다 5.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2012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2015년 3월 공개.)

갖추는 ‘기본 자격’에 불과하다. 높은 영어 성적, 유창한 제2외국어 실력, 동아리 활동 경험, 공모전 수상 경력, 봉사활동 등 남들보다 더 나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쉽 없이 뛰어다닌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대다수 기업에서 신입 지원자들에게 ‘직무 관련 경험’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며,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위해 공부를 하고, 동시에 이 모든 스펙까지 갖추는 데에 4년이라는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요즈음의 젊은 세대를 흔히 삼포세대(三抛世代)라고 부른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다. 포기한 것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대학생에게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 사치스럽게 여겨질 뿐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며 사회의 흐름에 관심을 갖는 일도, 선거철이 되면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도, 대학생에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포기함으로써 인해 남들보다 뒤처지고, 취업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사실로 인해 결국 정치와 사회로 눈을 돌릴 수 없게 된다. 대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각박하고 불합리한 사회 구조 그 자체가, 대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것들 대신 정치 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2. 신뢰의 부재

앞서 언급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가 대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대학생은 기꺼이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대학생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했다.

힘들다고 외치는 대학생의, 청년들의 목소리에 사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 명문대의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겉으로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듯 했지만 은연중에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젊은 세대에게 이미 일자리를 차지한 기성세대는 직업을 갖기도 전에 ‘직무 관련 역량을 기르라’고 요구하거나, 그도 아니면 ‘눈을 낮추라’고 조언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삶의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에게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학생들을 만나는 한 자리에서 악덕 업주를 만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많다는 이야기에 대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 악덕 업주가 나쁜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도 결국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미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은 대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서서 바꿔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렸다.

정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거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상품을 만들거나,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 벗어난 엉뚱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등록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소득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도 근본적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청년층은 분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혹은 비정규직의 제거), 직장 안정성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안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니 대학생 집단 내부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가장 불신하는 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인이 85.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¹⁶⁾. 2위는 언론인이었다.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대학생에게는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사법부 또한 대학생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86%로 나타났으며, ‘법보다 권력과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의견도 87%나 되었다¹⁷⁾.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집단들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들로 전락한 것이다.

적지 않은 수의 대학생들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가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각종 SNS에 정치와 사회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치 참여가 저조한

16) 지난해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아 실시한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5.3%가 사회에서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로 정치인을 꼽았다. 이어 언론인(7.2%), 군인(2.0%), 사업가(1.9%), 법조인(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는 대학생(15.9%), 시민단체(13.5%), 농민(10.4%), 교수·교사(10.0%)를 들었다. 이 조사는 전국 2-4년제 대학 재학생 1906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17)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월 법의 날을 맞아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5.69%가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법이 대체로 준수된다.’는 응답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는 응답은 0.24%에 그쳤다. ‘법보다 권력과 돈의 위력이 더 크다.’는 의견은 87.01%에 달했으며,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에 54.1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번번이 신뢰를 저버리는 집단에게 또다시 기대를 걸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많은 대학생들이 정치 참여에 에너지를 소모하며 언젠가 바뀔 세상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회가 원하는 틀에 맞는 인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대학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대학생의 인식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Ⅲ. 대학생과 사회의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1. 대학생의 과제: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지는 의미가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대학교와 대학생의 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얻는 것 자체가 특별했다. 대학생이라는 ‘특별한 자격’을 얻은 이들은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했다. 당시의 대학생들은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며 사회 변혁을 주도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누구나 거쳐 가는 삶의 단계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의 대부분은 대학생이거나, 대학생이라는 시기를 거쳐 온 사람들이다. 이제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대의 대학생에게 과거와 같은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대학에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대졸자의 역량’을 갖추기도 빠듯한 이들이 정치 참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진 대학생 집단 안에는 다양한 사회 계층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대학생 집단’으로서 한데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다원화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의 정치적 무관심을 모두 정당화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젊은 세대에게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서 사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는 젊은 세대를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손쉬운 정치 참여 방법은 ‘선거’이다. 20대 투표율의 절대적 수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사실이 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의 회의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투표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대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문제는 투표율 상승의 정

도가 작은 탓에, 여전히 20대 투표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뒷전일 수밖에 없다. 대학생은 아직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아직은 회의를 느끼며 포기할 자격이 없다. 투표율을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인 이후에도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제야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사회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하소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면, 정치인들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대의 투표율 상승 움직임에 정치권이 앞 다투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놓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았다. 이제는 그와 같은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젊은 세대의 더 큰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은 ‘뽑을 사람이 없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이 만족스러운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선거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닌,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고르는 일이다. 더불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일 또한 투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정치권 전반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은 대학생이 겪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고안하던 정치인마저도 의욕을 잃게 만들 뿐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이들을 위해 애써 좋은 정책을 만들어줄 정치인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학생 사회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계급의식이 강해진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계층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대학생 또한 출신 학교나 집안 배경 등으로 인해 일정 부분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의 계급의식은 훨씬 유연하며 변동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젊은 세대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미래에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게 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사회 통합의 제고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은 틈틈이 사회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이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를 더욱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치권의 과제: 신뢰 형성

많은 정치인들이 대학생도 엄연한 유권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공식 석상에서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다양한 고충을 털어놓는 대학생들에게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던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등의 답변을 하는 정치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에서는 다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 대학생은 ‘자식뻘’의 나이이기는 하나 이들 간의 관계는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 ‘과거에는 더 힘들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정당화하는 정치인은 필요하지 않다. 정치권에게는 부당한 사회 구조로 인해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때,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치인에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당연시해도 좋을 권리는 없다. 그 대상이 자식뻘의 나이인 대학생이라고 해도 말이다. 있지도 않은 권리를 남용하는 정치인에게서 유권자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주요 정당들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거나 정책 제안을 공모하는 등 대학생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대학생의 정치적 관심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탈정치를 선택한 대학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결국 ‘정책’으로서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토론 문화의 확산: 토론 대회를 중심으로

소통의 기본은 ‘대화’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고,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사회가 원하는 틀에 맞추어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일은 생소하고 어렵다.

토론은 생산적인 대화의 방법 중 하나이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의 주장과 근거에서 문제점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강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토론’은 단순히 ‘말싸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토론을 회피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많은 기관에서는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대회는 그 중 하나이다. 토론대회에 참여하는 많은 대학생들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전공 수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스스로 대안까지 모색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학생 토론대회 운영에 있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모범이 되는 점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토론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의 토론대회에서는 소수의 대학생만이 실제로 토론할 기회를 얻는다. ‘서류 전형’이라는 예선 과정을 통해 수많은 팀이 탈락하며, 8팀, 16팀 등 상당히 적은 수의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이는 토론대회를 진행하는 데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인력, 비용 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토론대회는 100여 팀의 대학생에게 실제 토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수의 심사 및 진행 인력이 필요하고, 이틀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토론 문화 확산이라는 목적 달성에 충실하고 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심사평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대학생 토론대회에서는 심사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 이유는 조금씩 다르다. 진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소화하여 심사의 권위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은 ‘대학생 토론 문화 확산과 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대회의 취지에 역행하며, 지나친 경쟁을 조장한다. 각 토론에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것은 대회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기에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참가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참가자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이를 보완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연속적인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대회에서는 승자 또한 지난 토론의 심사평을 수용하여 다음 토론에서 훨씬 더 나은 토론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것은 소통 능력의 주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심사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대회는 어떠한가. 참가자들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매 토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토론 능력의 향상은 거의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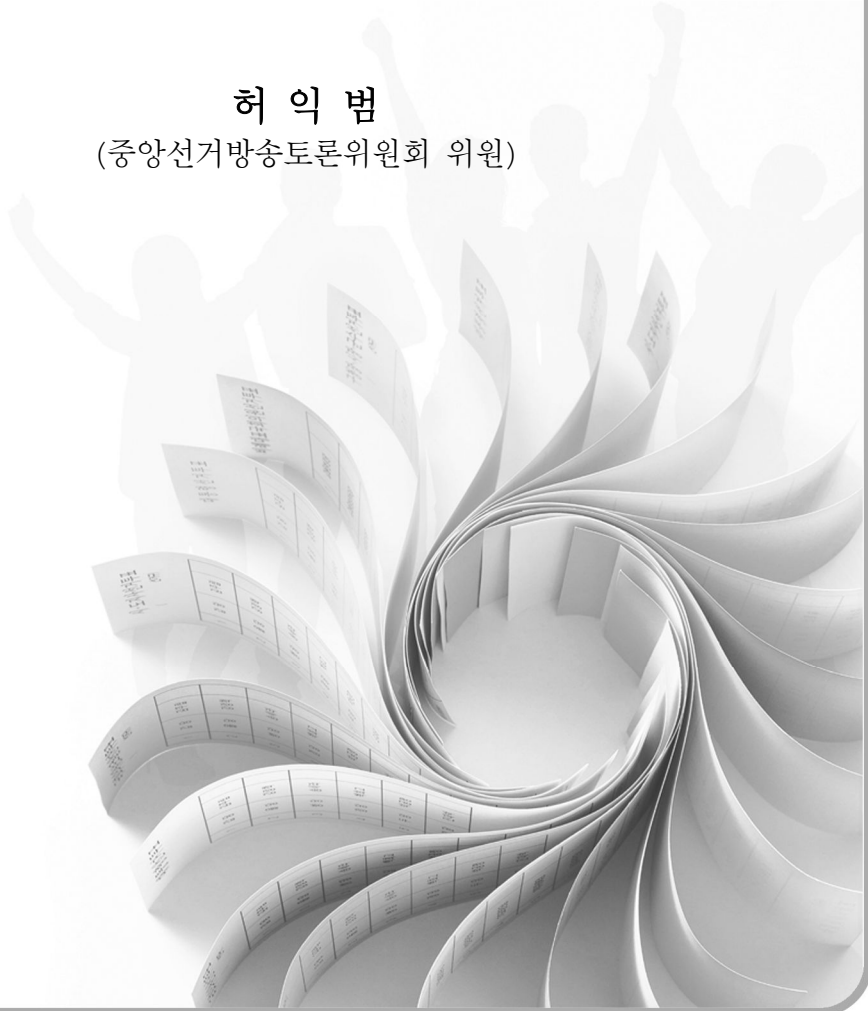
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토론 대회에서 동일한 학교 및 동일한 학회 출신의 참가자가 상위권에 진출하며, 같은 해에 이루어진 다수의 대회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반복 수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회 시스템 하에서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원래 잘 하는’ 사람만이 빛을 발하는 대회는 그저 스펙의 일종이 될 뿐, 토론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자신보다윗 사람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대드는’ 일이 되며, 동료들에게 의견을 피력하다가는 ‘쓸데없이 진지하다’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고,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꼰대질’이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 사회에는 말할 수 있는 곳, 말하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론대회가 그저 말할 수 있는 곳을 넘어 말하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참가자의 역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양한 토론대회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가자들의 소통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대회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한 대학생들이 진심으로 토론에 흥미를 느끼고, 다른 이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할 수 있을 때, 토론 문화는 자연스레 확산될 것이다.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허익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제4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유권자대토론회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국민공감마당”
토론문

허 익 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도입]

공동체가 갈등을 해소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은 민주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근대에 들어와 전국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정에서 지역, 세대, 정당, 이해단체 사이의 분열과 거리가 심해지는 양상이 반복되어 오고 있다.

이 역효과를 선거과정에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1995년 서울시장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이 도입되었고¹⁸⁾ 이는 기존의 도식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운동장유세의 단점을 크게 보완하였다.

2004년 선거방송토론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토론회와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외에 고등학생, 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입후보 예정자 선거방송토론 연수, 청소년 스피치토론캠프 등 토론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제 10년이 경과한 지금 과연 선거방송토론회가 선거방송토론이 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였는지, 개선방향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본다.

18) 미국이 선거에 TV토론을 도입하기 시작한 건 1956년이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내 경선을 위한 ABC방송 주관으로 마이애미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나아가야 할 길]

선거방송토론은 우선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토론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기와 비교할 때 진행방식은 분초단위의 기계적인 배분과 토론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직된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총량제나 토론자간 상호토론 등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¹⁹⁾ 여전히 답답하고 토론의 맥을 끊는 인상이 남아있어 보다 나은 진행방식이 요구되고 있다.²⁰⁾

나아가 토론방식 소개와 시간관리에 치중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토론의 방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필요성이 크다.

둘째, TV중계방송시간대를 언제로 할 것인가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방송사는 낮은 시청률과 관심 등을 내세워 대선을 제외하고는 주로 평일 오전 10시~12시의 시간대나 오후 2시~4시로 편성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 시청할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아 오히려 시청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누가 토론자로 나설 것인가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정책토론회의 경우 당의 대표나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출석한다면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TV를 통하여 방영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책과 의견을 알리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공영적 성격이 강한 것이므로 공영방송사도 시간대 편성에 적극 협조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정당도 방송토론의 목적에 상응하는 토론자를 참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²¹⁾

19) 이종희, 2010, '선거방송토론 제도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창간호, 343-370; 이종희, 오지양, 2011, '후보자 TV 토론회 토론포맷 연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1), 48-78.

20) 많은 학자들은 토론진행방식의 역동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참여형 토론포맷 도입에 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송종길, 2003,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 형식(Format) 비교연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최 합동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2, 109-130; 김춘식, 2006, 'TV토론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2006 선거방송토론백서』, 142-152; 권혁남, 2010, '유권자 밀착형 선거방송토론 방안 연구', 『언론과학연구』, 10(2), 5-38; 이종희, 2010, '선거방송토론 제도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창간호, 343-370; 김찬태, 2011, '제18대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21) 많은 선행연구들은 TV토론 중계방송시간을 유권자들의 시청이 용이한 시간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제안해 왔다(권혁남, 2010, '유권자 밀착형 선거방송토론 방안 연구', 『언론과학연구』 10(2), 5-38; 윤종빈, 2010, '선거방송TV토론의 현황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8(2), 149-167; 이강형, 2014, '선거방송토론 10년, 성찰과 미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10주년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 자료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TV토론 평가 및 효과연구』, 중앙선거

또한 선거방송포맷과도 연결되므로 토론에 유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즉 유권자직접질문이나 토론참여, 전문가의 토론참여 등의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토론내용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한다.

토론주제는 시민단체와 학계, 정당, 법조 등의 제안을 받고, 여론과 공모를 모아 선정하는데 유권자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각 정당간의 정책차이나 후보자의 공약차이도 중요하나, 유권자의 알권리가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관건은 토론자들의 준비와 참여의 정도이다. 주제의 제기에 준비된 답변이나 상대방 비난에 중점을 두는 토론자가 계속되는 현실은 유권자가 시청을 외면하고 토론회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요소이다. 정당은 당의 범위를 벗어나 전국의 유권자에게 정책철학과 이행의지와 방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갈등을 해결하고 의견을 모아 협상하여야 할 일에, 여전히 일방적 주장만이 있고 상대의 의견은 모두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현 모습을 정치적 이슈에서도 답습하고 있고 때로는 폭력을 수반하기도 한다. 화합과 소통보다는 차별성과 승리만을 추구한 결과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의 면에서는 토론과 협상의 결과물이다. 미래의 정치참여자에게 공정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요청하기 위하여는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토론기법을 가르쳐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대학생 토론대회에 이어 후보자나 일반인 선거방송TV토론연수²²⁾, 고등학생 토론대회도 시행 또는 시행할 계획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부와 연계하여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토론문화를 배양한다면 앞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사회갈등관리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²³⁾ 또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단체간, 단체-행정기관 간 협상과 토론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방송토론위원회 의뢰 (사)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또한 선거방송토론시간대를 법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어왔다(정창화. 윤종빈. 조지현. 김연중. 강내원,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환경분석 및 제도평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 평가」 세미나 자료집,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은철, 2009, 『한국선거방송토론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혁남, 2010, ‘유권자 밀착형 선거방송토론 방안 연구’, 『언론과학연구』, 10(2), 5-38.).

22) 이 프로그램 참석후 10%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2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선거토론연수원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사회의 다원화는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의 다양화, 복잡화, 심화를 수반한다. 따라서 갈등해소를 위한 국가,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토론전문기관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역할과 연구를 하여 사회와 국가의 에너지소모를 막아야 한다.

갈등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한 이성적 논의과정 속에서 덜 소모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토론전문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참여를 통한 토론문화개발, 갈등관리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마련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